



권익 구제의 열쇠!!

행정심판이 여러분의 소중한 권익을 지켜드립니다.



전국 어디서나 빠르고, 간편하게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으로부터
국민의 권리를 보호해 드립니다.

www.simpan.go.kr

인터넷으로 쉽고 편리하게 행정심판을 청구하십시오.

행정심판대상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 / 국가유공자 등록 거부 처분 / 각종 국가면허, 인·허가 관련 처분 /
영업정지·과징금·부담금 부과 처분 / 국가시험의 불합격 처분 / 정보공개 거부 처분 등

청 구 방 법

• 인터넷 : www.simpan.go.kr • 팩스 : 02-360-3556 • 전화상담 :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10
• 우편·방문 : 120-70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87(미군동) 임광빌딩 국민권익위원회

소 관 사 항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행정기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의 처분 또는 부작위
• 시·도행정심판위원회 :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자치행정기관(시장, 군수, 구청장)의 처분 또는 부작위

01+
02

국민권익

A Bimonthly Magazine of ACRC
2013 vol.30 01+02

발행일 2013년 2월 15일
(각월간, 통권 30호, 비매품)

발행인 이성보

발행처 국민권익위원회

편집인 최학균

주소 120-70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87(미군동)

전화 02-360-2761

팩스 02-360-3520

홈페이지 www.acrc.go.kr

블로그 blog.daum.net/loveacrc

트위터 twitter.com/loveacrc

페이스북 www.facebook.com/loveacrc

기획 | 디자인 | 인쇄 조선뉴스프레스

외부필자의 원고는 위원회의 공식 입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기 / 획 / 특 / 집

02 인터뷰 | 이성보 국민권익위원장

“전국 각지 민생현장 찾아가...
국민들이 웃을 때까지 적극 소통”

06 커버스토리 | 권익위 5년 성과... 한국형 권익구제 모델 세웠다

국민고충 해결은 빠르게
청렴국가 실현은 더 가깝게

10 110 행복레시피

“힘들게 일하는 경비원들 제대로 대접받았으면”



CONTENTS



공 / 감 / 누 / 리

12 포커스

불량식품, 공익신고로 뿌리뽑는다

14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사판 생수 취급 시 주의사항 구체 표기하라”

18 글로벌 권익위

‘부패방지 노하우’ 전수... 2103년에도 세계로, 세계로
APEC 회원국들과 반부패 정보 공유

소 / 통 / 누 / 리

22 권익위가 갑니다 | 충남 보령·서산·태안

“위원장님도 오셨네요”- 즉석에서 민원해결

25 광고 신도시 조정회의 현장

신도시에 ‘콩나물 교실’ 피할 방안 마련

26 조사관의 현장이야기 | 행정문화교육민원과 조덕현

퇴직 전 못 받았던 초과근무수당 받아야죠

28 블로그기자단

“권익위의 다양한 활동 실시간으로 전해요”

행 / 복 / 누 / 리

30 여행 | 통영 미각여행

봄바다에 취하고 봄맛에 미소짓다

34 시네마 토크 | <베를린>

액션에 스토리 입히고 유령 같은 음모 벗기다

36 건강 다이어리

‘나트륨과의 전쟁’ 싱거워야 건강해진다

38 역사속 권익

뇌물죄와 반인륜 범죄는 죽을 때까지 사면 제외

40 컬처&컬처

여기가 회사야? 갤러리아?

42 알아두세요

후전세 서민에 월세자금 빌려준다

43 뉴스&피플

44 독자와의 대화

이성보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전국 각지 민생현장 찾아가... 국민들이 웃을 때까지 적극 소통”

일반인들이 잘 모르는 사안이 하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정부 16개 부처 장관과 함께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 매주 참여한다. 단순한 ‘위원회’가 아니라는 얘기다. 지난해 12월 11일 이성보 위원장이 국민권익위원회 4대 위원장으로 취임했다.

서울 중앙지법판장을 끝으로 28년간의 법원 생활을 끝낸 이성보 위원장은 약자보호 판사로 이름이 높았다. 임기 동안 청렴과 약자 보호에 집중하겠다는 이성보 위원장의 포부를 들어봤다. 글·김남성 기자

취임 2개월 소감 부탁드립니다.

“오랜 법관 생활을 마감하고 행정부로 근무처를 옮기게 되어 처음에는 당황스럽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가지 않은 길’을 새로이 가 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사실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직 2개월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국민의 눈높이에서 모든 업무를 바라보고, 현장을 직접 찾아가서 국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의 역동적인 모습에 감명을 받았습니다.”

사법부인 법원에서 행정부 소속인 권익위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위원장님이 느끼기에 어떤 점이 가장 다릅니까.

“우선 매주 국무회의에 참여해야 하기 때문에 아침 운동 할 시간이 없네요.(웃음) 사실 우리 위원회가 행정기관 중에는 법원과 가장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국무회의, 국회에서 열리는 각종 회의에 참여하고 언론에 노출되는 일도 많아요. 무엇보다 현장조정이나 이동신문고에 참여하기 위해 전국각

지를 발로 뛰어야 해서 ‘법원에 비하여 활동성과 적극성이 많이 필요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권익위원장 취임 때, 언론에서 약자 보호 판사가 권익위원장이 됐다고 보도했습니다. 평소 장애인 단체에 기부도 꾸준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판사 시절, 기억에 남는 사회적 약자 보호 판결이 있다면 소개해주세요.

“장애인 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그리 많지도 않은데 언론에서 계속 칭찬해주니 오히려 부끄럽습니다. 더 많이 베풀고 더 좋은 정책을 펴라는 걸로 알고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형사단독판사 시절 이른바 시국사건으로 서울대 법대생 등 2명을 재판한 적이 있어요. 당시 법대생 어머니가 ‘자신의 아들이 법대(法臺) 위에서 재판하는 판사가 될 것으로 기대했는데 이렇게 피고인이 되어 재판받을 줄은 몰랐다. 선처해주면 바른 길로 이끌겠다’며 물물로 쓴 편지를 받고 집행유예 판결을 한 게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억울한 사건 당사자가 자신의 법적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판결 할 때 법관으로서 보람이 크지요. ▲수업배제로 인한 교수권 침해를 이유로 대학 측에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 ▲한전이 원고 소유 토지 상공에 설치한 고압송전선 철거를 명한 원고 승소 판결 ▲취객을 방치함으로써 사망에 이르게 한 데 대하여 국가(경찰)의 책임을 인정한 판결 ▲법정에서 증인으로 나온 사람이 당사자에게 상해를 입게 된 데 대하여 법원과 검찰 모두에게 증인 보호를 제대로 하지 못한 책임이 인정된다고 한 판결 ▲고엽제 후유증인 당뇨병과 심근경색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여 공무원 질병으로 인정한 판결 등이 기억에 남습니다.”

사법부에서 경험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권익위 업무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 권리를 구제한다는 점에서 법관과 권익위원장 업무연관성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권익위의 사명이 억울한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찾아주고 우리 사회의 부정과 부패를 없애 공정사회를 만들고자 함에 있습니다. 이는 법원과 매우 유사합니다.

법관 생활 동안 쌓아온 법적 사고력, 정의감, 억울한 시민들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 등 저의 역량을 총동원하여 국민들과 소통을 게을리하지 않으면서 우리 사회의 문제점들을 찾아내고 이를 개선해가는 노력을 기울일 생각입니다.”

이제 박근혜 정부가 출범합니다. 민생정부, 국민대통합 등의 국정기조와 관련하여 향후 권익위 업무방향에 대해서 알려주십시오.

“박근혜 정부는 ‘민생정부’, ‘국민대통합’, ‘깨끗한 정부’ 등을 핵심가치로 내세우며 ‘개인별 맞춤형복을 지향하는 정부 3.0 시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이 행복하고 청렴한 나라’의 미션 수행을 통해, 이러한 가치들을 실천하고 있는 위원회에 거는 국민들의 기대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로 권익위가 출범한 지 5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위원회는 ‘찾아가는 국민불편 해결’과 ‘실천중심의 청렴시스템 구축’으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권익정책 기반을 마련하였고, 기능통합의 시너지 효과를 통해 ‘융합적 국민권익 구제모델’로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국민들의 권익구제 수요는 증가하고 있고 다양한 이해관계 대립에 따른 사회적 갈등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부패행위 처벌 공직자가 감소되지 않고, 권력형 비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국가청렴도는 정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위원회는 국민과의 공감대 형성을 통한 행복한 사회, 체계적인 부패방지를 통한 신뢰할 수 있는 정부를 만들기 위해 지난 성과를 토대로 권익보호 기구로서의 역할을 더욱 발전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새 정부에서도 국민과 소통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국민과 접점에 있는 권익위와 위원장께서는 앞으로 어떻게 국민과 소통을 해나갈 계획입니까?

“먼저 모든 정부 정책과정에 국민이 참여해서, 국민의 입장에서 정책이 수립되고 추진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서 권익위의 ‘국민신문고 전자공공토론’을 확대·발전시켜 명실상부한 범정부 ‘온라인 정책토론 시스템’으로 만들 예정입니다.

또 각 지역에 찾아가서 상담하는 이동신문고와 현장에서 집단민원을 중재하는 현장조정이라는 좋은 정책이 있습니다. 올해는 총 50개 지역에서 이동신문고를 운영하고, 현장조정도 더욱 확대해서 민생현장을 직접 찾아가 주민들의 고충과 애로를 경청하고 함께 고민할 예정입니다.

위원회는 정부부처 중 기관 명칭에 ‘국민’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유일한 기관입니다. 그만큼 국민을 위한 가치 있는 일을 많이



“국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겠습니다.” 이성보 위원장이 사무실에 있는 신문고를 치면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하고 있는데, 아직도 잘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는 국민이 많습니다. 올해는 위원회를 알리는 노력을 열심히 해서, 국민들이 위원회를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인 저부터 국민들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가려 합니다. 그 일환으로 얼마 전 트위터(@sb56acrc)를 개설했습니다. 아직 익숙하진 않지만, 다양한 국민들과 진솔하게 소통하겠습니다.”

세대·지역·계층 간 갈등도 우리 사회가 극복해야 할 큰 문제입니다. 이러한 갈등해결에 권익위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지역 이기주의를 넘어서 세대 간, 계층 간 이기주의로 인한 사회적 갈등과 대립이 첨예하게 늘어나고 있어, 단순한 접근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위원회는 집단갈등에 대한 노하우를 다른 어느 기관보다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량을 십분 발휘하여 위원회를 필요로 하는 분쟁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현명한 해결책을 모색하겠습니다. 또 갈등은 사후 해결도

중요하지만, 갈등발생 초기에 적절한 대응을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위원회는 매일 정부로 접수되는 1만여 건 이상의 민원 정보를 분석해서, 정책적 갈등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각 부처와 수평적으로 소통해서 갈등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지난 1월에 직접 현장을 찾아 지역 주민들의 민원을 상담하고 집단갈등도 해결하셨는데, 느낀 점을 부탁드립니다.

“올해 1월 처음으로 민원현장에 찾아가 주민들과 대화도 나누고, 집단민원도 해결했습니다. 이동신문고가 찾아간 충남 서산에서 주민과의 간담회가 있었는데, 주민들께서 너무나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역시 ‘현장에 답’이 있었습니다. 공무원들이 국민생활 현장 속으로 찾아가 확인하고 생생한 목소리를 듣는 것이 ‘국민행복’을 위한 첫걸음이라는 것을 새삼 느꼈습니다.

또 광교 신도시의 교육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집단민원 현장

에서 주민들과 관계기관을 중재했습니다. 광교 신도시 입주예정자가 학교 추가건립을 요구하는 집단민원이었는데, 대규모 공공사업 과정에 발생하는 주민들의 피해와 이해관계의 대립을 생생하게 느꼈습니다. 다행히 학교 수요조사를 다시 하기로 하는 중재안에 원만하게 합의해서, 신도시 입주예정자 자녀들에게 바람직한 교육환경을 마련해주는 발판이 되었다고 봅니다.

사회적 갈등으로 확대될 수 있는 사건을 조기에 해결하여 처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다시 한 번 했습니다.”

위원장님께서도 신년사에서 ‘부정청탁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 추진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법 제정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부정청탁금지법은 부패한 공직자를 적발·처벌하는 데 목적이 있는 법이 아니라, 공직사회가 부패하지 않도록 공직자의 바람직한 행위기준을 매뉴얼화한 겁니다. 부패방지정책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킬 수 있는 획기적인 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 캐나다 등 선진국뿐 아니라 몽골, 대만, 라트비아, 리투아니아와 같은 개발도상국가에서도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법률이 있어요. 우리나라의 사회, 경제, 문화 수준을 고려해 볼 때, 이제야 이러한 법 제정을 추진하는 것은 상당히 늦은 측면이 있습



이성보 위원장(왼쪽)이 1월 24일 오후 서산시 인지면 소재 모월3리 마을회관에서 개간지 불하문제로 40여 년간 민원이 지속되다가 최근 권익위 의견표명으로 해결의 단초가 마련된 양대모월지구 주민들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

니다. 이 법이 마련되면, 공직자들이 오히려 마음 편하게 일할 수 있어요. 청탁하러 온 친인척, 지인들에게 ‘이런 법이 있으니 안 됩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 관계기관 협의를 마무리해서 조속한 시일 내 정부입법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권익위 직원들과 소통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국민들과 소통하는 것 못지않게 내부 직원들과의 소통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취임 이후 모든 부서와 돌아가면서 점심식사를 하거나 저녁에 가벼운 회식자리를 갖고 있습니다. 자리를 함께 한 직원들의 얼굴과 이름은 꼭 기억하려 하는 것인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에게 나중에 제가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 같은 눈치면, 꼭 다시 한 번 이름을 알려달라고 부탁하기도 합니다.”

권익위에 오셔서 상대방을 배려하는 ‘권익주법(權益酒法)’ 전도사로 새로운 회식음주문화를 전파하고 계시다는 얘기가 들리는데요.

“법원이나 정부 부처 회식문화는 아직 일방적인 부분이 많습니다. 저는 회식할 때 개인술잔은 위생상 본인만 사용하도록 하고, 여분의 잔을 하나 돌림잔으로 준비합니다. 술을 돌리는 사람은 받는 사람이 원하는 만큼만 술을 돌림잔에 따라주고, 받는 사람은 돌림잔의 술을 개인술잔에 따라 원하는 만큼 마시면 됩니다. 굳이 폭탄주를 마시는 경우라도 공급자 중심에서 모두 똑같은 폭탄주를 돌리는 것이 아니라, 수요자 중심에서 술이 아니고 물이나 음료수라도 본인의 취향에 따라 능력껏 자신의 잔을 만들어서 원하는 사람끼리 건배를 하면 한껏 분위기를 낼 수 있습니다. 모두가 기분 좋은 술자리로 만드는 것이 바로 좋은 회식음주문화라고 생각합니다.”

새해를 맞아 앞으로의 각오나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세요.

“올해는 지난 2008년 ‘통합형 권익구제 기구’로 출범한 위원회가 한국형 권익구제 모델로 새롭게 한 단계 도약하는 원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시기에 위원장을 맡고 있어 그 책무가 결코 가벼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국민과 가장 가까이에서 국민의 어려움을 해결해주는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국민만을 바라보고 힘차게 전진하겠습니다.”



권익위는 지난 5년간 찾아가는 고충 해결과
실천중심의 청렴시스템 구축 등 통합적 권익구제
정책을 추진하였다.

국민고충 해결은 빠르게 청렴국가 실현은 더 가깝게

권익위 5년 성과... 한국형 권익구제 모델 세웠다

2013년 2월, 국민권익위원회가 과거 국민고충처리위원회와 국가청렴위원회,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의 기능을 합쳐 새롭게 탄생한 지 만 5년을 맞았다. 여러 기관에 분산되어 있던 고충민원 처리·부패방지·행정심판 기능을 통합함으로써 국민의 권익구제 창구를 일원화한 권익위는 지난 5년간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실행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발전시켜...

글·박경아(중앙사이미디어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국민신문고는 고충민원, 국민의 불만 민원, 부패신고, 행정심판, 국민제안 등을 일괄 접수·처리하는 정부의 대표 민원창구다. 2012년 한 해 동안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민원은 125만 건에 달한다.

이렇게 접수된 민원은 국민신문고 시스템을 통해 관계부처에 통보하여 처리되며, 권익위는 매년 처리기간 준수율, 만족도 등을 평가하여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권익위는 정부대표 민원전화 110을 통해서도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317개 공공행정 업무에 대해 상담·안내를 하고 있으며, 2012년 한 해 동안 214만 건을 처리했다.

권익위에서 이렇게 많은 민원의 접수와 처리가 가능한 이유는

과거 국민고충처리위원회와 국가청렴위원회,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등에 분산되어 있던 고충민원 처리·부패방지·행정심판 기능을 통합함으로써 국민의 권익구제 창구를 일원화해 효율성을 높였기 때문이다.

3개 기관 통합 전인 2007년 4만9096건이던 고충민원·부패신고·행정심판 등 권익구제 건수는 권익위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2년에는 6만756건으로 24%가 늘었다.

국민들의 만족도는 ▲고충민원이 2008년 66점에서 2012년 85.6점으로 ▲행정심판은 2008년 62점에서 2012년 72.9점으로 상승했다. 또한 행정효율성도 높아졌다. 2007년 542명이 4만9096건의 민원을 처리하던 데에서 2012년에는 482명이 6만756건을 처리했다.

현장 중시 쌍방향 소통

권익위는 지난 5년간 '현장에 답이 있다'는 원칙 아래 국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으며 현장 중심의 빠른 고충 해결로 국정신뢰도를 높여왔다.

현장으로 찾아가 국민 고충을 듣는 '이동신문고'를 178개 지역에서 운영했으며, 해묵은 민원은 현장조정(139건)으로 해결했다. 고충민원 처리 기간도 2007년의 32일에서 2012년 14일로 단축됐다.

행정심판은 국민이 보다 적은 비용으로 간편하게 권익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공정하고 신속하게 운영됐다.

특히 장애인, 신규고용 촉진 장려금, 중소기업의 각종 지원 청구 등 생계형 행정심판 사건에서 청구인들의 의견을 받아들였다.

또 행정심판의 재결기능을 권익위로 일원화하여 처리기간을 10일 이상 단축(2007년 81.6일 → 2012년 70.5일)했으며, 행정심판이 완료되기 전이라도 청구인의 불이익을 줄일 수 있도록 '임시처분제도'를 운영하는 등 청구인의 권리를 강화했다.

반부패·청렴 정책으로 정부 신뢰성 제고

권익위는 그동안 반부패·청렴 정책을 통해 정부의 신뢰성 제고에도 앞장섰다.

먼저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대상을 381개에서 662개 기관으로 확대했으며, 자율적인 부패방지 노력도 촉진했다. 또 청렴연수원을 개원하여 청렴교육을 공직 전환기별로 실시하고 생애주기별 교육으로 확대했다. 청렴교육 대상을 공직자뿐 아니라 시민사회, 기업인, 외국 공무원 등으로 넓혔다. 반부패, 청렴 노력의 일환으로 2011년 9월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시행됐다. 이후 1443건의 신고가 접수되어 1337건이 처리(112건 이첩, 674건 송부)됐다. 건강·안전·환경 등 분야에서 국민적 감시체계가 확립된 것이다.

그동안 부패신고 전화 1398 등을 통한 부패상담도 활성화되고, 부패신고의 엄정한 처리, 신고자 보호 보상 내실화 등 후속조치가 이어졌다. 2011년 2월에는 15개 의회에서 지역의 부패 고리 근절을 위한 지방의원 행동강령을 시행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주요정책 추진 성과

민원정보 분석

- 국민신문고 민원 >> 연 125만 건
- 110콜상담센터 >> 연 214만 건
- 행정심판 >> 연 3만 건
- 국민제안 >> 연 10만 건
- 청와대 서신 민원 >> 연 2만 건
- 부패신고·상담 >> 연 6만4000건



국민의견 수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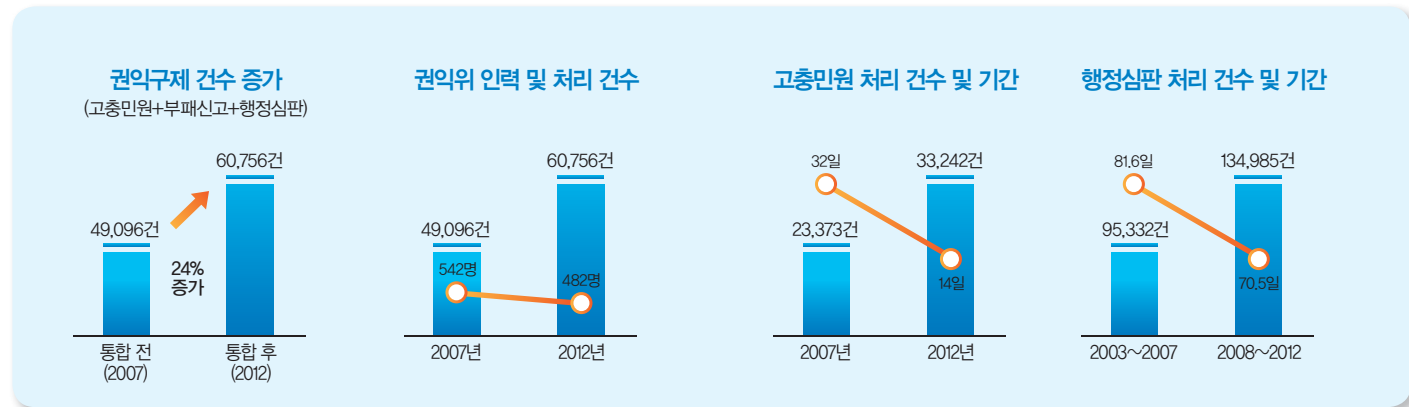
- 전자공공토론(쌍방향) (부처) 일자리·보육 등 과제 제안
- (국민) 온라인, SNS 참여
- (부처) 토론결과 반영
- 국민제안(국민 → 부처)



민원정보 제공·개선

- (권익위) 부처 실시간 제공 이행상황 관리
- (각 부처) 정책개선

※ 국민신문고 2008년 유럽 전자정부 최우수상, 2011년 유엔 공공행정상 우수상 수상



권익위의 청렴도 평가는 2012년 유엔 공공행정상 대상을 수 상했으며, 이는 2010년 열린 서울 G20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반부패 행동계획'과 더불어 우리나라의 청렴 이미지를 제고하는 데 기여했다.

비효율적 제도 개선해 권익 신장

지난 5년간 권익위의 성과를 말할 때 비현실적 낮은 관행과 권익 침해 유발요인을 제거한 제도개선을 빼놓을 수 없다.

이런 제도개선의 하나가 국민부담 경감을 위해 2008년 시행된 '자동차 운전면허 발급 절차 간소화 개선'이다. 권익위는 또 2011년 학력미달, 정신질환 등을 이유로 병역의무를 기피하는 사례 발생을 막기 위해 병무청 등에 '병역의무 회피방지 제도개선 방안'을 권고했다. 2012년에는 캐디, 대리운전기사 등 근로보호 사각 지대에 놓인 특수형태 근로자들의 고충 해결을 위해 '특수형태 근로자의 권익보호 제도개선'을 내놓기도 했다.

권익위는 이러한 제도개선 사례를 포함해 지난 5년간 ▲고질적 부패 취약분야 제도개선(105건) ▲국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고충예방 제도개선(355건) ▲민생에 부담을 주는 행정규칙(1684건) 정비 등을 추진해왔다.

국민의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는 새 정부에서의 정책방향

새 정부는 민생정부, 국민대통합과 깨끗한 정부, 국민행복을 국정 키워드로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권익위의 정책목표, 기능과 직접

적으로 관련이 있다.

먼저, 민생정부를 위한 통합적 권익구제 대책을 지속 추진해야 한다. 국민신문고를 통한 고충민원, 행정심판, 부패신고 사건을 일괄 처리, 110콜센터를 통한 정부와 관련한 모든 민원의 충실한 상담과 함께 국민에게 불편을 주는 제도와 법령은 원스톱으로 개선할 수 있어야 한다.

국민대통합과 깨끗한 정부를 위한 객관적 조정자의 역할도 강조될 것이다. 사회적 갈등 및 국민과 행정기관 간 대립을 제3자적 시각에서 중재·조정하여 사회적 낭비를 줄이고, 반부패 체계를 확립하여 국격에 맞는 신뢰받는 정부를 만드는 데 앞장서야 한다.

국민행복 실현도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다. 특히,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건강, 안전 등 공익에 대한 침해행위를 예방하는 일, 공익 신고자에 대한 보호기반을 확충하는 일 등이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과제이다.

한편, 이러한 높은 수준의 권익보호 기능은 다음과 같은 정책으로 구체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진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효과성 높은 정책 추진 요구

첫째, 부정부패 없는 깨끗한 정부를 실현해야 한다.

깨끗한 정부는 공직윤리 확립, 부패유발 요인 개선이라는 사전예방 대책과 처벌규정 보완이라는 사후통제 대책이 유기적으로 작동될 때 가능하다.

이를 위해, 신뢰받는 공직윤리 체계의 확립을 위해 퇴직공직



지난해 9월 동해시 이동신문고 현장의 모습.

자의 재취업과 관련한 제도를 보완하고, 여러 부처에서 분산 운영되어 효과성이 떨어지는 공직윤리업무의 일원화 문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부정청탁금지법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제정하여 ▲청탁 사슬, 부정한 사익추구 등 처벌과 부패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우리 사회에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청렴연수원을 활용한 ▲청렴의식·윤리마인드 확산 ▲소비자 이익, 공정경쟁 등 공익침해에 대한 신고자 보호제도의 적용범위를 기업·민생침해 부패로 확대하는 방안도 병행 추진하여야 한다.

이러한 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국민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현재 45위 수준인 국가청렴도를 OECD 선진국 수준(20위권)으로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국민신문고·전자공공토론으로 정책소통과 국민통합을 견인해야 한다.

주요 정책을 통한 민원동향 분석으로 각종 민원에 사전 대응하고 정책단계별 모니터링으로 국민 의견을 반영함으로써 정책품질을 높이고, 국민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최점점의 실시간 쌍방향 토론의 장인 국민신문고 전자공공토론을 활성화하여 교육, 취업, 생활안전 등 주요 정책 이슈에 대해 세대·계층별 심층적 의견을 수렴하고 법정부적 차원의 개선을 적극 유도하여야 한다.

셋째, 민생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민생 현장을 파고드는 적극적 권익구제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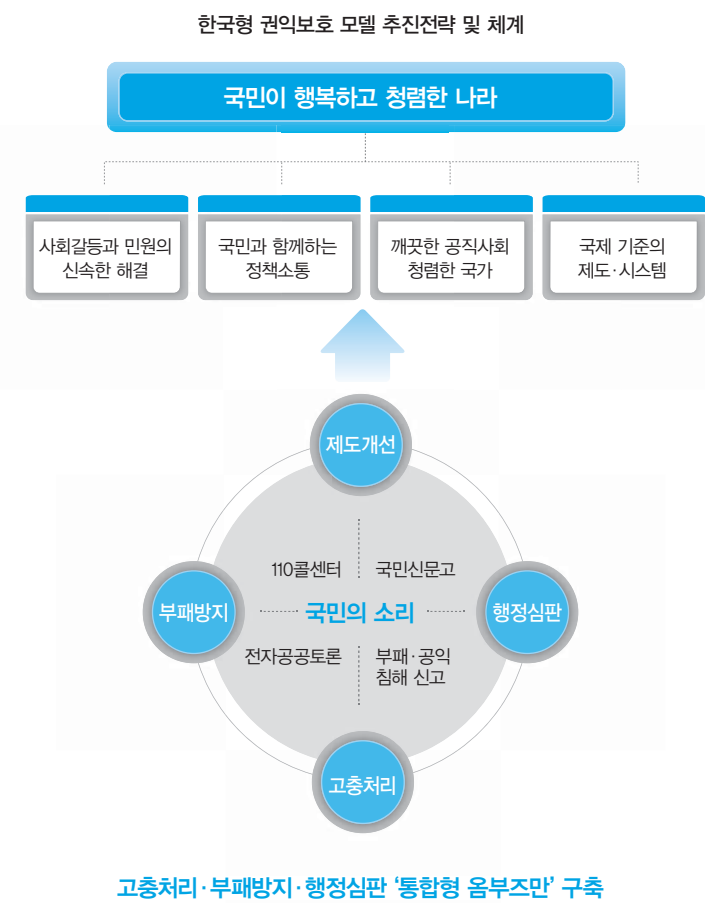
국민신문고, 고충민원과 행정심판 처리, 제도개선 기능을 유

기적으로 연계하여 사회적 약자, 서민, 중소기업 등을 위해 작지만 피부에 와 닿는 문제를 해결하여 따뜻한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는 것은 권익위가 추진해야 하는 대표적인 정책과제라 판단된다.

한편, 국민의 생활 가까이에서 불편함을 해결해왔던 이동신문고를 취약계층 위주로 확대하고, 해묵은 민원에 대한 현장 조정도 적극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행정심판의 경우, 저비용의 권익구제 방법인 점을 적극 홍보하면서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위해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 지원, 집행지 등 임시처분제도 활용, 온라인 허브시스템 구축을 통한 재결례 등 공개 확대가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사회·경제적으로 많은 비효율을 발생시키는 공공정책 갈등 해결에 집단민원 해결 전문성과 노하우를 가진 권익위가 적극 참여하는 방안도 전향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힘들게 일하는 경비원들 제대로 대접받았으면”

맘대로 쉬지도 못하고 임금체불 사례도

국민권익위원회의 110 정부민원안내콜센터는 정부 민원에 대한 모든 궁금하고 불편한 일들을 해결할 수 있는 정부대표전화 서비스입니다. 110여 명의 전문상담사가 5000만 국민을 대상으로 상담한 횟수가 벌써 1000만 번을 넘어섰습니다. 국민과 함께 울고 웃으며 상담한 내용은 〈110 행복레시피〉라는 이름으로 권익위에 차곡차곡 저장됩니다. 이 중 생계침해 신고상담을 맡고 있는 한 상담원의 행복레시피를 소개합니다.

아파트, 회사, 은행 등 어느 건물에 가든 우리는 ‘경비’ 업무를 하는 분들을 제일 먼저 만난다. 경비라는 직업이 얼마나 힘든지는 어느 정도 알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법 규정상 경비는 ‘감시·단속적 근로자’라 하여 근로기준법상의 휴게 시간과 휴일 기준을 적용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더 안타까운 부분은 임금이다. 경비업, 그러니까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임금은 일반 근로자 최저임금의 90% 수준(2011년까지는 80%)에 불과하다. 게다가 용역 계약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도 빈번하다.

얼마 전 상담을 통해 진정서를 접수해 드린 한 민원인 역시 경비업 종사자였다. 임금을 받지 못했더니 어려움을 호소하던 그분의 민원을 상담하면서도 나는 그가 얼마나 힘든 상황인지 미처 생각지 못했다. 그저 ‘사업주들이 참 너무 한다’라는 생각에 임금

체불 진정서 접수를 도와주었을 뿐이다.

그로부터 얼마 후, 경비업을 하는 또 다른 분이 상담을 요청했다. 이번에는 근로자의 휴식 시간에 대한 것이었다. 나는 규정에 나와 있는 대로 ‘근로 시간이 4시간이면 30분, 8시간이면 1시간의 휴게 시간이 적용되며, 식사 시간으로 대체될 수 있다’고 안내했다. 그러자 민원인이 말했다.

“저는 하루에 18시간을 일하는데, 식사 시간 50분을 제외하고는 단 10분도 휴식 시간이 없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이게 사실일까’ 하는 생각이 먼저 들었다. 나는 관련 법규를 찾아보았다. 안타깝게도 민원인은 휴게 시간 적용 제외 대상 근로자였다. 심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분께 규정대로 정확하게 안내할 수밖에 없었다.

“사무적으로 대한 것 같아 마음 아파”

무거운 마음으로 상담 전화를 마친 뒤, 나는 며칠 전 임금체불 건으로 진정서 접수를 도와주었던 민원인이 생각났다. 나는 민원인에게 확인 전화를 했다. 그 민원인은 진정서 접수 후 밀린 임금을 모두 받았다고 했다.

정말 다행이었다. 하지만 당시 내가 너무 사무적으로 업무처리를 한 것은 아닐까 반성했다. 규정에 정해진 정확한 내용을 안내해야 한다는 생각이 앞서 어찌면 기계적인 응대를 하지는 않았을까. 그것 때문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전화를 건 민원인의 마음이 상하지는 않았을까 하는 생각에 다시 한 번 나를 돌아보는 계기가 됐다.

정리·이상훈 기자



일러스트 이철원

공 / 감 / 누 / 리

포커스 불량식품, 공익신고로 뿌리뽑는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시판 생수 취급 시 주의사항 구체 표기하라”

글로벌 권익위 ‘부패방지 노하우’ 전수

불량식품, 공익신고로 뿌리뽑는다

과징금 부과·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 보상금 지급

불량식품과 위해식품 제조·유통에 대한 공익침해 신고 접수가 최근 크게 늘어나면서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이들 범죄에 대해 무거운 과징금 처분과 장기간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식품위생법 관련 문제가 공익신고 대상에 해당된다는 점이 아직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지 않다며 많은 국민이 이를 숙지하고 적극적으로 공익신고에 나설 것을 당부했다. 글: 권세진 기자

국민의 건강과 직접 관련된 불량·위해식품 문제가 공익을 침해하는 중대한 문제로 취급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행위와 관련한 공익침해 신고가 잇달아 접수되면서 행정관청과 연계, 영업정지·과징금·검찰 수사 등 강력한 처분을 내리고 있다고 밝혔다.

공익신고를 하는 사람은 2012년 9월 30일부터 시행 중인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신변보호 및 불이익과 관련해 법적인 보호와 구조금 등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신고 결과에 따라 보상금도 지급받을 수 있다.

권익위는 국민들에게 주변에서 일어나는 불량·위해식품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공익신고에 나서도록 독려하는 한편 향후 법적으로 공익침해 행위를 적용할 수 있는 분야를 더 확대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수도권 장례식장에서 사용되는 편육(머릿고기)을 제조하는 충남 소재 A식품업체는 자사 제조 제품에서 식중독균이 검출돼 제조중지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편육을 계속 장례식장에 공급하다가 권익위에 신고되면서 2012년 12월 천안시로부터 영업정지 2개월, 과징금 6360만원의 처분을 받았다.

다이어트식품을 판매하는 경기도 소재 B식품업체는 자사 홈

페이지에 소비자들이 체험후기를 올리는 것처럼 꾸며서 다이어트 효과를 허위·과대광고한 사실이 적발돼 2012년 12월 해당 식품의 1개월 제조정지 처분을 받았다.

경북 소재 C업체는 영업신고나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검증되지 않은 중국산 음식조리용 기구를 불법 수입하여 인터넷 동호회를 통해 판매한 사실이 적발돼 (식품위생법 위반)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최대 10억원까지 보상금... 적극 홍보

국민권익위는 불량식품 관련 신고로 인한 벌금·과징금 부과 시 업체에서 내는 과징금의 일부(4~20%)를 이를 신고한 신고자에게 보상금으로 돌려주고 있다. 관련법에 따라 신고자에게는 최대 10억 원까지도 보상금 지급이 가능하다.

참고로 편육제조사인 A식품업체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신고자 신상공개 금지... 불이익 안 받아

2011년 3월 29일 제정 · 공포돼 2012년 9월 30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행정기관이나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신고한 사람은 법적으로 보호·지원받을 수 있다.

모든 국민이 신고할 수 있는 공익침해 행위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 등 민간분야에서 주로 발생하는 공익침해 행위를 뜻한다. 이에 따라 식품위생법, 폐기물관리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총 180개 법률에서 벌칙·행정처분을 가져오는 위반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 신고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인적사항 공개가 금지되며, 신변보호를 받을 수 있고, 신고로 인한 불이익으로부터 원상회복을 받을 수 있다. 또 신고 결과 벌금·과징금 부과 등으로 국가·지자체의 수입이 증대될 경우 보상금(최대 10억 원)을 받을 수 있으며, 치료·쟁송·임금손실 등 피해비용 발생 시 구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신고할 수 있는 공익침해 행위의 유형 및 사례는 아래와 같다.

공익침해 분야	주요 사례
건강	불량식품 판매, 무자격 의료행위 및 의약품 조제·판매 행위
안전	철도교량 부실시공, 특정 고압가스 미신고 사용, 건축물 붕괴
환경	낙동강 폐놀 유출, 폐기물 불법 매립, 폐수 불법 유출
소비자 이익	가짜 식자재 유통, 각종 허위·과장 광고
공정경쟁	LPG 가격 담합, 유사석유 판매 및 사용

의 비리를 국민권익위에 신고한 신고자는 A식품업체가 내는 과징금 6360만원의 20%인 1272만원을 최대 보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불량식품 등 식품·건강 분야 공익침해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위반 시 공익침해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법률이 ‘식품위생법’ 등 180여 개에 이르지만, 아직도 ‘학교급식법’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공익침해로 인정받지 못하는 만큼 향후 공익침해 행위로 적용할 수 있는 법률을 더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민의 건강을 해치거나 위해·불량식품과 관련한 각종 공익침해 행위의 신고는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권익위·부패·공익침해신고센터나 권익위 홈페이지(www.acrc.go.kr) 등을 통해 할 수 있으며, 전국 어디서나 공익침해 신고전화(국번 없이 1398)로 전화상담도 가능하다.

“시판 생수 취급 시 주의사항 구체 표기하라”

캐디·학습지 교사 등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근로기준 마련 권고

국민권익위원회는 법과 제도의 미비로 인해 국민이 불편과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동분서주하고 있다. 권익위원회는 최근 먹는 샘물에 대한 안정성 강화 방안과 아파트 공급계약 약관 중 매수인의 계약해제권 강화, 취약계층을 위한 국민연금제도 보호 방안 등 최근 권고한 제도개선 4건과 행정심판 사례 2건을 소개한다. 글·이성훈 기자



생수 성분 표기 짚짚하게... 수질검사 결과 공개도

우리가 매일 사먹는 생수의 성분표기와 주의사항, 성분함유량 관리가 한층 강화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시중에 판매되는 생수의 취급 시 주의사항을 구체적으로 표기하고, 무기물 함유량의 오차 범위 지정, 생수 품질검사 결과 공개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하는 제도 개선안을 담당부처인 환경부와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이는 권익위가 지난해 10월부터 약 3개월에 걸쳐 실시한 생수 생산업체와 유통현장 실태조사에 따른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권익위는 “생수 관련 실태조사 후 소비자가 생수를 고를 때 안심하고 보다 다양한 선택기준을 가질 수 있게 관련 부처에 생수 관련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익위의 실태조사 결과 현재 시판되는 대부분의 생수 제품에서 ‘개봉 후 보관 및 음용 관련 주의사항’ 표기가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생수는 여름철에 냉동시키거나 겨울철 온장고 보관으로 인해 변질되거나 미생물이 번식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무기물질 함유량 표시의 오차범위에 대한 규정이 없어 표시범위를 실제 검사 결과보다 부풀려 10배 넘게 지정하는 경우가 허다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밖에 시판 생수 중에 일부는 여러 수원지에서 취수한 물을 하나의 제품명으로 판매하고 있었는데 이때 수원지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무기물 함량 표시는 동일하였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생수 용기에 음용·보관·취급상의 주의사항에 대한 표시를 강화하고 무기물질 함유량 표시의 오차범위를 지정하도록 하고, 동일 제품이라도 수원지가 다를 경우 수원지별로 무기질 함유량을 표기하도록 권고했다.

권익위는 또한 생수 수질검사에 대한 결과를 각 제품사와 시·도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조치했으며, 식품 접객 업소에서 생수병을 재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개선안도 내놓았다.



아파트 계약 표준약관 매수인 권리 대폭 반영

건설사의 무단 설계변경, 시공상 하자 등의 이유로 계약해제를 요구하는 소송과 민원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지만, 분쟁해결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바로 아파트 공급자에 비해 불충분하게 규정되어 있는 매수인 계약해제 조항 때문이다. 현재의 아파트 표준약관 해제 조항에는 민법에서 인정하는 매수인의 권리가 충분히 반영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계약해제와 관련한 민원이 끊이지 않는다.

권익위는 이처럼 계약해제 조항 미비로 인해 발생하는 민원을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해 아파트를 분양받는 자(매수인)도 아파트 공급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다양한 사유들을 아파트 공급계약 표준약관에 명시도록 공정거래위원회에 권고했다.

권익위가 최근 3년간 온라인 정부민원창구인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아파트 분양계약 해제 관련 민원 2000여 건을 분석한 결과 ▲매수인의 계약해제 사유가 아파트 공급자에 비해 불충분하게 규정된 것 ▲매수인이 위약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제한적으로 규정된 것 ▲아파트 공급자가 일방적으로 반환금 이자를 정하는 것 등에 대한 민원이 집중적으로 제기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의 공정위 표준약관에는 계약해제가 가능한 매수인의 귀책사유는 상세하고 포괄적으로 나와 있으나, 아파트 공급자의 귀책사유는 ‘입주지연’ 1개로만 규정되어 있다. 특히, 중요사항에 대한 무단 설계변경, 하자보수가 곤란한 심각한 부실시공, 이중분양으로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한 경우 등은 민법상 계약해제권이 인정되는데도 불구하고 표준약관에서는 계약해제 사유로 명시되지 않고 있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아파트 공급자 잘못으로 인한 매수인 계약해제 사유를 ‘입주지연’ 외에도 중요사항에 대한 무단 설계변경, 심각한 부실시공 등 법적 분쟁이 잦고 매수인들의 이해나 관심이 집중되는 중요한 계약해제 사유에 대해서는 아파트 공급 표준약관에 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하여 일반인들이 보다 쉽게 알 수 있도록 권고안을 마련했다.

장애연금 신속 지급·수급 대상자 범위 확대 권고

김○○씨는 후두암 진단을 받고 후두를 적출한 후 장애인 등록을 마쳤지만,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국민연금법상 장애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1년 6개월을 기다려야 한다는 설명을 들었다. 김씨는 후두적출은 복원이 불가능한 영구 장애에 해당하는데 왜 1년 6개월을 기다려야 하는지 이해를 못 하는 상황이다.

국민신문고에는 국민연금 관련 민원이 2010년 3918여 건에서 2011년 4197건으로 늘어나는 등 사회·경제적인 변화를 반영하여 국민연금제도를 개선해달라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다.

이에 권익위는 경제성장 둔화에 따른 실업자 증가와 높아지는 이혼율, 장애인 권익 보호에 대한 공감대 확산 등을 반영한 국민연금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권익위는 먼저 경제적 사정으로 연금보험료를 미납해 현재 ‘적용제외자’인 사람은 장애연금을 받을 수 없다는 조항에 대해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현행 법규에 따르면 연금보험료를 10년 이상 장기 납부했다더라도 전체 납부기간(최초 가입 시부터 60세까지)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장애를 입어도 장애연금을 받을 수가 없다. 권익위는 장애연금 수급 대상자의 범위를 ‘10년 이상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였던 자’ 등

으로 변경, 수급 대상자 범위를 확대하였다.

또한 앞서 김씨 사례처럼 장애 판정을 받은 가입자가 조기에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일부 병의 경우 지급사유 발생일을 조기에 확정하도록 권고했다.

이직률 높은 특수형태 근로자 고용불안 해소 기여

골프장 캐디, 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등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바로 일반 근로자와 유사한 일을 하면서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않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란 점이다.

이들은 근로자와 유사한 노동력을 제공하는데도 인적·경제적·조직적 종속성이 없다는 이유로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해 근로계약이 아닌 구두계약이나 제삼자에 의한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권익위가 최근 3년간 접수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들의 민원을 분석한 결과 이들은 고용불안과 불규칙한 근무 환경, 과도한 근로시간 등에 노출돼 있어 제도적인 도움이 절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는 노동계에서 39

개 직종 약 250만 명, 정부에서는 2010년 말 기준 약 115만 명으로 각각 추산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들이 처한 가장 큰 문제는 고용불안이다. 계약서에 계약기간조차 명시하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이고, 계약기간을 정한다 하더라도 1년 이내로 체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취업 후 이직률도 80~90%에 이른다. 계약 해지나 기간 갱신 절차도 명문화되지 않아 사업주가 임의로 계약을 해지하면 하루아침에 실업자로 전락하는 등 고용 불안정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다.

또한 근로기준이 없어 기본적 권익을 보호받을 수 없는 문제도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반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휴식시간을 제외하고 주 40시간 이내로 제한하고 있으나,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는 낮은 소득을 보충하기 위해 근로시간을 연장해 일평균 약 12~13시간 근로를 하는 등 자의적·타의적으로 장시간 또는 불규칙 근무를 하게 된다.

그밖에 실적 저조 시 해고나 무단휴무 시 벌금, 무노동 무임금 원칙 등으로 휴가·휴일 사용에 대한 심리적·경제적·정신적 부담을 느끼고 이로 인해 연중무휴로 근무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권익위는 ▲계약서 작성의 의무화 ▲부당한 노무계약 해지 금지 ▲보수 지급기준 ▲휴일 및 연차 휴가 등의 근로기준을 담은 가칭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권익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도록 권고했다.

“공동 2위 수상자인데 1점 적다고 공익근무 불하는 잘못”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예술 콩쿠르 공동 2위 수상자가 1점이 적다는 이유로 공익근무 불허 판정을 받은 것은 잘못”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중앙행정심위는 국제음악콩쿠르에서 공동 2위로 입상한 A씨가 “2위 이상 입상 시만 가능한 공익근무요원 편입을 사실상 3위라며 인정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며 낸 행정심판 청구 사건에 대해 2012년 12월 14일 A씨의 손을 들어 주었다.

A씨는 근래 개최된 국제음악콩쿠르 피아노 부문에 나가 외국인 참가자와 함께 공동 2위로 입상했다. 이후 그는 병무청장이 정하는 국제예술경연대회에서 2위 이상 입상 시 예술분야 공익근무



요원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한 병역법 시행령에 따라 공익근무요원 복무를 신청했지만 병무청은 “또 다른 2위 수상자보다 1점이 적어 실제로는 3위”라는 이유로 공익근무요원 편입을 거부했다.

이에 대해 중앙행정심위는 ▲관련 법에서 예술분야 공익근무요원 편입대상으로 ‘병무청장이 정하는 국제예술경연대회에서 2위 이상 입상한 경우’라고 규정할 뿐 공동 입상 시 편입을 제한하는 근거규정이 없기 때문에 A씨를 공익근무요원에서 제외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기록 경기와 달리 예술 분야는 기량과 능력을 1~2점 차로 순위를 매기기 어려운 특수성이 있고 ▲병무청장이 인정한 권위 있는 국제대회에서 심사위원 전원 동의로 공동 2위를 했다면 두 사람은 동일한 기량을 펼쳤다고 보이며 ▲공동 2위로 대외 발표된 수상자를 1점이 적다는 이유로 공익근무를 허락하지 않은 것은 예술특기자를 통한 국위선양이라는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직무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영양교사 처벌은 잘못”

학교에서 식중독 사고가 났더라도 직무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영양교사를 처벌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는 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행정심판이 나왔다.

2012년 2월 식중독 사고가 난 ○○시 소재 모 초등학교의 역학조사에서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된 급식 파래가 원인으로 추정된다는 결과가 나오자 같은 해 7월 보건복지부는 해당 학교 영양교사의 영양사 면허를 1개월간 정지시켰다.

하지만 영양교사는 조사결과에 자신이 ‘학교급식법’ 등에서 정한 업무를 소홀히 했거나 잘못했다고 볼 만한 점이 없다고 되어 있고, 문제가 된 바이러스도 학교에서 수거한 보존식에서 검출된 것이 아니라 배식 후 보름 정도 지난 시기에 학교의 음식재료 공급업체에서 수거한 파래와 바닷물에서 검출된 것이어서 면허정지가 부당하다며 중앙행정심위에 2012년 8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부패방지 노하우’ 전수 2013년에도 세계로, 세계로

몽골 부패방지청과 반부패 협력 연장 체결... 국제교육과정 개설도

국민권익위원회는 몽골에 부패방지 노하우를 장기간에 걸쳐 전수하고 APEC 회원국들과 반부패 정책에 대한 토론을 갖는 등 세계 각국과 반부패 및 투명성·청렴도 강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권익위는 세계 각국의 부패방지 관련 기관들과 지속적인 교류·협력을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반부패 기관으로 거듭나고 있다. 글·권세진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방지 노하우가 2015년까지 몽골에 전수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13년 1월 15일 서대문구 통일로 청사에서 몽골 부패방지청(IAAC·Independent Authority Against Corruption)과 반부패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연장 체결

하고, 오는 2015년까지 부패 예방과 척결을 위한 양국 간 협력활동을 더욱 확대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의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보상 제도’와 법령상 부패 위험요인을 진단하는 ‘부패영향 평가제도’가 2015년까

지 몽골에 전수된다.

몽골 부패방지청은 2007년 설립된 몽골의 독립적인 반부패 기구로, 지난 2010년 2월 국민권익위원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지난 3년간 공동 반부패 세미나 개최, 초청연수 등의 협력 활동을 이행하고 상호 간 반부패 역량 강화에 기여해왔다. 당시 MOU에 명시된 기간인 3년이 종료됨에 따라 또 3년 연장하기로 한 것이다.

권익위에 외국공무원 대상 국제교육과정 개설

특히 몽골 부패방지청은 권익위와 MOU를 통해 도입한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제도에 따라 2010년부터 몽골의 공공기관들을 대상으로 2년마다 청렴도 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이 평가제도는 공공기관의 청렴수준을 진단하는 제도로 2012년 유엔공공행정상 부패방지분야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이밖에도 공공기관이 반부패 정책을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시행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제도인 ‘반부패 경쟁력 평가’ 역시 도입하기 위해 실무검토 중이다.

권익위는 앞으로도 몽골을 비롯해 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과 체결한 반부패 협력 MOU를 성실히 이행하고,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외국 관계기관과의 업무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해부터 외국 반부패 기관 공무원을 대상으로 국제교육과정을 개설하여 국제사회에 한국의 반부패 정책을 홍보하고 전수할 계획이다. 부패방지청장(장관급)을 비롯해 4명으로 구성된 몽골대표단은 1월 14~18일 한국 방문 기간 동안 MOU 연장체결식에 이어 청렴연수원을 방문하는 한편 권익위의 주요 반부패 정책과 행정안전부의 공직자 재산신고제도에 대한 소개를 청청했다. 몽골 관계자들은 올해 상반기에 부패영향 평가 연수 및 외국공무원 대상 반부패 교육과정 이수를 위해 다시 서울을 찾을 예정이다.

업무협약식에 참석한 국민권익위원회 박재영 사무처장은 “반부패 국제협력의 주요 파트너로서 한국과 몽골이 부패문제 해결에 있어 상호 간 더욱 긴밀히 협력하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번 몽골 대표단 방문은 몽골 부패방지청총이 한국 방문을 통해 MOU 연장체결 및 반부패 정보공유를 요청해 이뤄졌다. 몽골 부패방지청에서는 간볼드 나와수른 부패방지청장(장관급) 나 랑바타르 자브홀랑트 사무처장, 바트사이항 장자 재산심사부장 등 4명의 대표단이 한국을 방문했다.



국민권익위원회 박재영 사무처장(오른쪽 네 번째)이 1월 15일 오전 서대문구 통일로 권익위 청사에서 몽골 부패방지청 간볼드 나와수른(왼쪽 네 번째) 청장과 2015년까지 양국 간 청렴정책에 대한 기술을 전수하는 데 협력하는 내용의 양해각서를 연장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1. 몽골대표단에게 권익위의 반부패 정책 등을 소개하고 있다.
2. 박재영 사무처장과 간볼드 나와수른 청장이 양해각서에 서명하고 있다.
3. 권익위와 몽골 부패방지청 관계자들이 양해각서 체결에 앞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APEC 회원국들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제16차 반부패 투명성 워킹그룹회의에 참가해 2013년 활동계획을 논의했다.

APEC 회원국들과 반부패 정보 공유

1월 26~28일 ‘제16차 반부패 투명성 워킹그룹회의’ 참가

국민권익위원회는 1월 26~28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제 16차 반부패 투명성 워킹그룹회의(16th ACT Meeting)에 참가해 2012년 성과를 보고하고 2013년 활동계획을 논의했다.

반부패 투명성 워킹그룹(ACT·Anti-Corruption and Transparency Working Group)이란 2004년 칠레 APEC 정상회의에서 승인된 ‘산티아고 공약’ 및 ‘반부패 행동계획’의 이행 조정 및 회원국 간 협력 강화를 위해 구성된 조직이다.

참여국은 APEC 회원국 21개국(한국, 호주, 브루나이, 캐나다, 칠레, 중국, 대만, 홍콩, 인도네시아, 일본, 말레이시아, 멕시코, 뉴질랜드, 파푸아 뉴기니, 페루, 필리핀, 러시아, 싱가포르, 태국, 미국, 베트남)이다. 2005년 한국 경주에서 제1차 APEC ACT T/F 회의 및 APEC 반부패 투명성 심포지엄을 개최한 것이 시작이며, 베트남·호주·페루·싱가포르·일본·미국 등에서 15차례에 걸쳐 회의가 열렸다. 2005년 한국 경주 1차 회의 당시에는 T/F형

태로 시작했으나 2011년 9월 미국 샌프란시스코 13차 회의부터는 WG(Working Group) 형태로 확대됐다.

워크숍에도 참가… 권익위 활동 소개

권익위는 이번 회의에서 한국의 반부패 국제협약 이행 경과 및 반부패 활동을 보고하고, 2012년 외부평가 권고안 검토 논의에 참여해 우리측의 입장을 전달했다. 또 APEC 회원국 간 반부패 국제협약 이행 독려 및 반부패 정책 정보공유, 역량강화, 기술지원을 위한 교류와 협력에도 적극적으로 나서는 방안을 회원국들과 논의했다. 또 권익위는 1월 28일 자카르타에서 열린 회원국 워크숍에 참석해 반부패 최신 국제동향을 파악하고 우수사례를 수집했다. 그뿐만 아니라 유엔공공행정대상 수상, 국제반부패아카데미 교류 활동, 청탁금지법 추진 결과, 청렴교육원 개원 등 권익위의 활동을 세계에 소개했다.



일러스트 이철원

소 / 통 / 누 / 리

권익위가 갑니다 “위원장님도 오셨네요”… 즉석에서 민원 해결
광고 신도시 조정회의 현장 신도시에 ‘콩나물 교실’ 피할 방안 마련
조사관의 현장이야기 퇴직 전 못 받았던 초과근무수당 받아야죠
블로그 기자단 “권익위의 다양한 활동 실시간으로 전해요”



“위원장님도 오셨네유” 즉석에서 민원 해결

충남 보령·서산·태안 이동신문고·민원청취 현장

충남 일대에서 찾아가는 민원해결 서비스인 이동신문고를 개최 중인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관들이 1월 24일 오전 서산시청 내 이동신문고 행사장에서 지역민의 민원을 상담하고 있다.

이동신문고가 지난 1월 충청남도를 찾았다. 이성보 국민권익위원장은 1월 24일 서산시청에서 열린 이동신문고에서 조사관들과 함께 민원 상담에 나섰고, 서산 소재 농지와 간척지 등 민원현장을 방문해 주민 목소리를 경청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했다. 글·권세진 기자

전국 방방곡곡을 찾아가 국민과 소통하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이동신문고가 1월 23~25일 충남지역을 찾아 고충민원상담에 나섰다. 권익위는 23일 보령시청, 24일 서산시청, 25일 태안군청을 방문해 충남 지역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고충민원상담을 진행했다.

이동신문고는 행정문화, 복지노동, 재정세무, 산업·환경, 농림, 도시수자원, 도로교통, 주택건축, 민·형사 법률 등 9개 분야의 전문 상담 조사관들로 이뤄져 있다.

상담민원 중 현장에서 처리가 가능한 민원은 현장에서 바로 합의 해결하고, 조사가 더 필요한 사안은 고충민원으로 접수해서 정밀조사와 위원회 심의절차를 거쳐 처리하게 된다. 또 개별적인



이성보 위원장(왼쪽)이 1월 24일 오전 찾아가는 민원해결서비스의 일환으로 서산시청에 마련된 권익위 이동신문고 행사장을 찾아 지역민의 민원을 직접 상담하고 있다.

이성보 위원장이 지난 1월 24일 서산시 인지면 모월3리 마을회관에서 주민들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



민원상담 이외에도 지역사회 각계 각층의 주민들로부터 건의사항을 수렴해서 정부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협의하고, 불합리한 법령이나 제도가 있으면 개선을 권고해 민원을 근원적으로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서산 상하수도 사업·폐기물 수거문제 현장서 합의

특히 1월 24일 서산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이동신문고에는 이성보 국민권익위원장이 직접 상담에 나서 민원인들로부터 관심을 끌었다. 조사관들이 이동신문고를 찾아온 주민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성심성의껏 해결하기 위해 분주한 가운데 이성보 위원장도

지역 주민들의 고충을 경청하고 해결책을 모색했다.

이성보 위원장은 고충을 호소하는 민원인에게 “충분히 이해가 되는 상황이며,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조사와 검토를 거쳐 해결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다짐했다. 다행히 현장에서 즉시 문제를 합의해 밝은 웃음을 짓는 한 주민에게 이성보 위원장은 “잘 해결되어 다행”이라는 인사를 전하기도 했다.

이동신문고 환경 분야의 상담을 맡은 김하식 조사관은 “지역 주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서 뿌듯하고 보람 있다”며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어떻게든 도와드릴 준비가 되어 있다. 많은 분들이 이동신문고를 통해 고충을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란다”는 바람

을 전했다.

이날 실제로 지역의 상하수도 사업, 폐기물 수거 등의 민원은 현장에서 바로 합의 해결했고,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사안은 ‘고충민원’으로 접수하였으며, 또한 건축물의 사용 허가와 같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사항은 관계 공무원과 같이 해결방안을 찾아보는 등 적극적이고 친절하게 상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이동신문고에 이어 서산시청에서는 이성보 위원장 주재로 ‘서산시민들과 함께하는 소통 간담회’의 자리가 마련됐다. 지역 주민들의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볼 수 있는 기회인 한편 크고 작은 지역 문제들을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는 뜨거운 토론의 장이었다.

이성보 위원장은 “논의된 문제들 중 해결이 가능한 문제들은 즉시 반영하고 정부부처의 협의가 필요한 문제들은 심도 있는 협의를 거쳐 그 결과를 알려주겠다”는 약속을 전했다.



이성보 위원장이 1월 24일 충남 서산A간척지 상습침수 민원현장을 방문해 배수시설 보강 등을 요구하는 민원인들과 의견을 나누고 있다.

2013년 지역형 이동신문고 운영 지역·일정

월별	권역	운영 지역
1월	충남	3 보령시(23), 서산시(24), 태안군(25)
2월	울산·부산	3 울산 울주군(20), 남구(21), 부산 기장군(22)
3월	전남	4 여수시(19), 순천시(20), 광양시(21), 구례군(22)
4월	경북	3 봉화군(24), 안동시(25), 의성군(26)
5월	경기	3 양평군(22), 남양주시(23), 양주시(24)
6월	경남	3 의령군(19), 진주시(20), 거창군(21)
7월	충북	3 청주시(17), 증평군(18), 제천시(19)
8월	-	- 미 실시(하계휴가, 을지연습)
9월	전남	4 신안군(24), 진도군(25), 강진군(26), 완도군(27)
10월	경북	4 영양군(22), 청송군(23), 영덕군(24), 울진군(25)
11월	전북	3 순창군(20), 남원시(21), 장수군(22)
12월	강원	3 춘천시(18), 횡성군(19), 원주시(20)
계		36개 지방자치단체

※ () 는 날짜 / 밑줄은 권익위 출범 후 최초 운영

양대모월지구 민원현장 방문해 해결방안 모색

이성보 위원장은 서산 이동신문고 및 소통간담회에 이어 충남 서산 양대모월지구 개발 관련 농민 민원현장을 방문해 조치상황을 점검하고, 매년 집중호우 시 침수피해가 반복되는 서산A간척지 상습침수 피해대책요구 민원현장을 방문해 민원 청취 후 해결방안을 모색하기도 했다. 이성보 위원장은 양대모월지구 민원인들과 만나 개간지 불하문제에 대해, 또 침수지역 민원인들과 만나 배수시설 보강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동신문고는 2012년 전국 51개 지역에서 운영해 총 1631건의 민원을 상담 처리했고, 그 중 약 20%인 332건의 민원을 현장에서 합의 해결하는 등 국민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도 일반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형 이동신문고를 36개, 외국근로자·소상공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맞춤형 이동신문고를 14개 지역에서 전국 권역별로 골고루 운영해나갈 계획이다.

신도시에 ‘콩나물 교실’ 피할 방안 마련

입주예정자들 집단민원… “용역 조사 후 필요시 개교 절차” 조정

지난 1월 8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고 신도시. 신도시 입주예정자 700여 명이 제기한 집단민원을 중재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 이성보 위원장이 현장을 찾았다.

민원 내용은 신도시 입주로 학생 수가 크게 늘어나는 만큼 학교 수도 늘려달라는 것이었다. 광고 신도시는 2007년 도시계획이 승인된 이후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 공동주택이 속속 들어서고 있으며, 대부분 2012년 12월부터 입주를 시작했다. 향후 광고 신도시의 신규 입주예정자는 7만7000여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입주예정자 수에 비해 학교 수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2007년 광고 도시계획 승인 당시 관계 기관들은 아파트 입주자만을 대상으로 학생 수를 예측해 학교 신설 계획을 세웠던 것이다. 이에 따라 현재 초등학교 6개와 중학교 5개, 고등학교 3개가 새로 개교할 예정이다.

오피스텔 거주 학생 수요는 예측 안 해

그러나 이 정도 규모로는 새로 입주할 신도시 주민의 자녀들을 모두 수용하기 힘들다. 문제의 원인은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이 최근 개정되면서 광고 신도시에 주거용 오피스텔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사실이 고려되지 않아 과밀학급 등 학교시설 부족 현상이 예상된다. 이에 신도시 입주예정자 700여 명이 지난해 말 국민권익위원회에 학교 수를 늘리도록 중재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한 것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들 신도시 주민들의 민원을 접수하고 수차례의 현장조사와 교육청, 지자체 등 관련 기관과 실무조정 협의 등을 통해 관계기관의 입장을 조율했다. 그 결과 1월 8일 수원 영통 경기도시공사에서 조정회의를 개최했다.

현장조정회의에는 민원인 대표 등 주민들과 윤성균 수원시 제1부시장, 이재영 경기도시공사 사장, 김국희 경기수원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참석한 가운데 이성보 위원장이 중재안을 이끌어냈다. 국민권익위 중재에 따라 ▲주거용 오피스텔 미분양 부지를 대상으로 오피스텔 건립을 제한하기 위한 도시계획을 변경하고 ▲전문기관에 학교 추가 건립 필요성을 검토하는 용역조사를 맡긴 후 더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오면 추가 개교 절차를 밟되, 용역 중간 결과 등도 주민설명회 형태로 입주예정자들에게 설명하는 내용이 합의됐다.

다른 신도시 유사민원 재발 예방 노력

민원을 중재한 이성보 위원장은 “이번 조정으로 광고 신도시 사업시행자와 교육청, 학부모들의 갈등을 합리적으로 해소하고, 공동주택 입주가 임박한 입주예정자 자녀들의 바람직한 교육권을 마련하는 단초를 마련해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앞으로 도시계획을 수립할 때 주거용 오피스텔과 도시형 생활주택 등에 거주하는 학생 수도 포함시켜 학교 건립계획을 수립하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해나가 신도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유사한 민원들을 줄여나갈 예정이다.



이성보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맨 오른쪽)이 늘어난 학생 수를 반영해 학교 수도 늘려달라는 광고 신도시 입주예정자 700여 명의 집단민원을 중재하기 위해 1월 8일 수원시 영통구 소재 민원현장을 방문해 관계자로부터 현황 설명을 듣고 있다.

퇴직 전 못 받았던 초과근무수당 받아야죠

현직 아니라는 이유로 지금 거부... 현장 찾아보니 해결책 보여

“작은 소리도 크게 들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관들은 전국에서 밤낮없이 ‘억울함이 없는 나라, 깨끗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은 조사관들이 현장에서 겪은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정라·이상훈 기자



“조사관님께, 30년 넘게 소방공무원으로 일하다 퇴직했는데, 현직에 있는 소방공무원들은 소송 없이도 초과근무수당을 주기로 하면서 우리 두 사람은 퇴직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해서 받아가라고 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보통은 전화나 서류로 먼저 사연을 접수하고, 이후에 권익위원회를 찾아오는데 이분들은 지방에서 직접 서울까지 상담을 위해 올라왔다.

사연을 들어보니 2008년 말 소방공무원으로 일하다 정년퇴직을 한 뒤 시골에 내려가 살던 이 두 사람은 우연히 예전에 같이 일하던 동료들 통해 ‘최근 3년간 일하고 받지 못한 초과근무수당을 돌려달라’는 소송에서 이겼고, 지급받지 못했던 수당을 대부분 돌려받았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

그래서 자신들이 근무했던 지역의 시에 “우리에게도 초과근무수당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였지만 시 공무원이 “퇴직 공무원에게는 지급할 규정이 없으니 소송을 해서 받아가라”는 말을 했다는 것이다.

“조사관님, 우리가 받아야 할 초과근무수당이 각각 1700만원과 2400만원입니다. 우리에게는 엄청나게 큰돈입니다. 일을 하지 않은 것을 달라는 것이 아니라 정당하게 일한 대가를 돌려달라는

거 아입니까.”

이야기를 모두 듣고 나서 일단 접수를 하시라고 안내를 해주었고, 며칠 뒤 공교롭게도 이들의 민원은 나에게 배정되었다. 좀 더 자세한 상황을 알기 위해 해당 지자체에 자료를 요청했다. 하지만 지자체의 반응은 싸늘했다. “도와주고 싶지만 근거가 없다”며 “법원의 판결을 받아오면 지급하겠다”는 원칙만 고수했다.

현직들에겐 소송 없이 지금... 형평성 어긋나

그러던 중 해당 시의 소방공무원들이 돌려받기로 한 초과근무수당의 30%를 시정 발전기금으로 내고 70%만 받기로 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지급 민원이 처음 제기된 탓에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기가 매우 어려웠다. 그래서 소방방재청으로 연락, 소방공무원의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담당자를 찾아 전체적인 자료를 받아보았다.

그 자료를 통해 전국적으로 약 1만2000여 명이 소송을 제기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어 경기도에 전화를 걸어 실태를 파악하고, 전라북도과 제주시의 1심 판결문을 입수하여 분석했다. 그렇게 기본 조사를 마치고, △△ 소방본부를 향해 KTX에 몸을 실었다. 민원인 두 명도 함께 만나기로 했다.

이렇게 모두 모이자 완고하게만 느껴지던 담당 과장도 조금은 유연한 자세를 보였다.

“우리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법률자문도 거쳤는데 방법을 찾지 못해 법원 판결을 받아오라고 했습니다. 우리 선배님들 아십니까. 당연히 해드리고 싶지요. 그렇지만 우리로서도 어쩔 수가 없지 않습니까.”

나는 “법률자문을 받았더니 그걸 좀 보자”고 했다. 어떻게 해서 퇴직자에게는 지급이 안 된다고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법률자문 내용을 보니, 그제야 이해가 되었다.

자문 의뢰 내용은 ‘퇴직자에게 초과수당을 줄 의무가 있느냐’며 소극적인 입장에서 질문을 던지고 있었다. ‘수당을 주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제로 그 방안을 찾는 듯한 느낌이었다. 반면 현직에 있는 285명은 소송 제기를 하지 않았는데도 ‘줄 방법은 없느냐’는 입장으로 자문을 의뢰하여 ‘줘도 된다’는 답변을 받은 것 같았다.

“권익위서 방법 알려주면 이행” 답변 받아내

“이건 명백한 차별이 아닙니까? 이분들이 분명히 일한 것은 맞지요? 법률 조언을 받을 때 ‘이분들도 줄 방법이 없느냐’고 물었으면 ‘줘도 된다’는 답변을 받을 수도 있었을 것 아닙니까?”

한동안 팽팽한 신경전이 이어졌다. 서로 입장을 주장하느라 대화는 내내 평행선을 달려야 했다. 결국 담당 과장이 “권익위원회가 좋은 방법을 알려주면 이행을 하겠다”고 한발 물러나는 것으로 그날의 대화는 정리되었다.

나는 위원회로 돌아와 곧장 법률보좌관실에 해당 민원에 대한 법률 검토를 의뢰했다. 그 결과 “의견표명 정도는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후 지루한 법리 공방이 이어졌고, 이 민원을 처리하는 데 3개월 넘는 시간이 걸렸다. 그렇지만 오랜 기다림 끝에 위원회에 상정하자 위원들은 “당연히 줘야 한다”며 의견표명하는 것으로 의결되었다.

의결이 되자마자 마치 내 일처럼 뿔 듯이 기뻐다. 곧바로 민원인에게 전화를 드렸다. 얼마나 기뻐하셨을지는 읽는 분의 상상에 맡기련다. 우리 위원회의 고충처리국에는 날마다 민원이 쌓인다. 보통 하루에 한두 건의 새로운 민원이 조사관들에게 배부된다. 조사관들은 갖가지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전국 방방곡곡을 찾아다닌다. 사무실에서는 도저히 답이 나오지 않는 해결의 실마리가 현장에 가면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보이곤 한다.

그런 경험을 한두 번 해본 뒤에는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면 아무리 먼 곳이라도 마다하지 않고 달려간다.



“권익위의 다양한 활동 실시간으로 전해요”

9기 블로그 기자단 출범... 20명 1년간 활약

국민권익위의 제9기 블로그 기자단 발대식이 지난 1월 10일 서울 서대문구 권익위 청사에 열렸다. 이날 발대식 행사에서는 권익위 이정보 위원장이 2012년 하반기 활동 우수자에 대한 표창과 2013년 블로그 기자단에 위촉장을 수여했으며, 블로그 기자 활동 우수 사례발표, 기자단 활동안내, 위원회 소개, 위원회 견학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권익위의 블로그 기자단은 국민들에게 좀 더 가깝고 좀 더 친근한 이야기로 다가가기 위해 권익위가 운영하고 있으며, 20대부터 50대까지 폭넓은 연령대가 참여하고 있다. 블로그 기자단은 권익위가 운영하는 국민권익위원회 블로그에서 활동하면서 권익위 소식, 정책정보, 생활정보 등을 주로 제공한다.

작년까지만 해도 권익위의 블로그 기자단의 활동은 6개월이 었지만 올해 9기부터는 1년으로 늘었다. “기사 작성 감각을 익힐 즈음 블로그 기자단 활동이 끝나 아쉽다”는 역대 블로그 기자단의 의견을 받아들여 활동기간을 늘린 것이다.

이날 위촉된 9기 기자단은 모두 20명이며, 기자단 중에 웹툰 기자로 선발된 3명은 권익위의 다양한 소식을 만화를 통해 전달한다.

블로그 기자단이 전하는 소식은 권익위의 정책소식에서부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전 분야에 걸쳐 있다. 실제 권익위 블로그를 방문하면 연극, 공연, 영화 등의 문화계 소식뿐 아니라, 개개인의 강점을 살린 역사나 문학, 여행 이야기 등이 풍성하게 올라온 것을 확인할 수 있다.

9기 기자단에 선발된 이영호(27)씨는 “재미있는 기삿거리를 발굴하고 기사로 만드는 과정에서 나 스스로 많은 공부를 하게 되어 취업준비에 도움이 된다”며 “사람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알리는 권익위 기자단 활동에 큰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충남 공주지역에서 활동하는 이씨는 2012년 7, 8기 권익위 블로그 기자단 활동을 마쳤고, 이번 9기 기자단에 재선발되었다.

국민권익위원회 블로그 <http://blog.daum.net/loveacrc>



일러스트 이철원

행 / 복 / 누 / 리

여행 통영 미각기행

시네마 토크 <베를린>

건강 다이어리 '나트륨과의 전쟁' 싱거워야 건강해진다

역사속 권익 뇌물죄와 반인륜 범죄는 죽을 때까지 사면 제외

컬처&컬처 여기가 회사야? 갤러리야?

알아두세요 卍전세 서민에 월세자금 빌려준다

뉴스&피플

독자와의 대화

통영 미각기행

봄바다에 취하고 봄맛에 미소짓다

경상도 음식은 맛이 없다? 이 말은 통영에서는 통하지 않는다. 봄이면 통영은 미식의 도시가 된다. 도다리썩국이며 멧게비빔밥 등 봄 별미가 넘쳐난다. 충무김밥, 꿀빵 등 통영만의 음식도 여행자를 즐겁게 해준다. 동백이며 매화, 산수유가 폭죽처럼 터지는 봄날. 통영으로 맛있는 여행을 떠나보자.

글과 사진·최갑수 (여행작가)

‘그림 같다’라는 말이 어울리는 곳 하면 통영을 꼽겠다. 해마다 이맘때쯤이면 그림 같은 통영의 풍경이 그리워 괜히 마음은 울렁대곤 했다. 지금쯤 바다는 봄 햇살을 쬔이고 있을 테고, 그래서 바다는 한없이 푸른빛일 테고, 봄바람에 실려 포구로 갈 매기 울음소리가 날아들 테고... 통영에 가보면 안다. 봄이 기지개를 켜는 사실을. 햇살은 가지런하고 은빛 물결은 눈부셔 눈이 멀 것 같다.

도다리썩국·멧게비빔밥... 맛있는 통영의 봄

봄이면 통영은 참 맛있다. 도다리썩국이며 멧게비빔밥 같은 봄의 특별메뉴가 가득 펼쳐진다. 이즈음 강구안에 서면 향긋하면서도 비릿한, 통영의 내음이 콧속으로 물씬 밀려든다. 통영의 봄을 알리는 음식은 도다리썩국이다. 2월 중순, 붉게 핀 동백이 하나둘 바다를 향해 떨어지기 시작하면 포구 앞 식당에 ‘도다리썩국 개시’라는 안내판이 걸린다.

도다리썩국은 봄에 나오는 자연산 도다리와, 역시 봄에 나오는 썩을 함께 넣어 끓인 국이다. 쌀뜨물에 된장을 풀고 도다리를 넣고 끓이는데, 도다리 살의 쫄깃한

동파랑에서 바라 본 통영항의 저물무렵.
통영은 경관이 뛰어나 동양의 나폴리로 불린다.



조청을 듬뿍 발라 달짝지근한 오미사꿀빵.



향긋한 향이 일품인 명게비빔밥.



통영의 별미 충무김밥.



싱싱한 해산물로 넘쳐나는 서호시장.



산양해안도로를 따라가다 만난 동백.



통영의 봄을 알리는 음식 도다리쑥국.

질감과 향긋하면서도 강한 쑥의 냄새가 어우러져 환상적인 봄맛을 만들어낸다. 도다리쑥국은 집집마다 만드는 방법이 조금씩 다르다. 쌀뜨물을 사용하는 곳도 있고 무나 다시마로 육수를 내는 곳도 있다. 하지만 어느 집이나 맛있기는 마찬가지. 봄을 놓치면 다시 일 년을 기다려야 하니 이즈음의 식당은 도다리쑥국을 맛보려는 손님들로 문턱이 닳는다.

항구도시답게 통영에는 먹을 만한 해장국이 많다. 대표적인 음식이 졸복국이다. 작은 봉어만 한 졸복을 넣고 끓여낸다. 국물이 아주 맑은데 미나리, 콩나물과 함께 끓이는 까닭에 시원하면서도 향이 무척 진하다. 살도 쫄깃하다. 복이 가장 맛있는 때는 10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졸복국과 함께 통영사람들에게 사랑받는 해장국이 시락국이 다. 시락국이란 시래깃국의 사투리. 하지만 이곳의 시락국은 다른 지방의 것과는 전혀 다르다. 장어머리를 고아낸 국물에 된장을 풀고 무청을 넣어 끓여낸다. 산초 가루와 김가루, 잘게 썬 고추와 부추무침을 입맛대로 넣어 먹는다. 뜨끈한 국물이 맵싸한 산초 가루의 향과 어우러져 시원한 맛을 낸다.

“새벽 서호시장 도라무통에 피는 불꽃이 왁자하였다/ 어둑어둑한 등으로 불을 켜고 튼 손들이 왁자하였다/ 송어를 송송 썰어 파는 도마의 비린내가 왁자하였다/ 국물이 끓어 넘쳐도 모르

는 시락국집 눈먼 술이 왁자하였다/ 시락국을 훌훌 떠먹는 오목한 입들이 왁자하였다”(안도현 ‘통영서호시장 시락국’)

개운하고 담백한 쑤기미매운탕… 충무김밥도 입맛 당겨

쑤기미라는 생선이 있다. 뽕락과의 생선이다. 통영사람들은 이 생선으로 매운탕을 끓여먹는다. 양식이 되지 않아 자연산만을 쓸 수 밖에 없다. 매운탕 마니아들은 삼식이매운탕, 뽕락매운탕과 함께 쑤기미매운탕을 최고로 친다고 한다. 별다른 양념은 하지 않고 고춧가루만 넣고 끓인다. 국물맛이 개운하고 담백하다. 육질은 아귀와 삼식의 중간쯤 된다. 부드러우면서도 쫄깃하다.

명게비빔밥도 먹어보자. 향긋한 통영의 봄을 제대로 느낄 수 있는 음식이다. 고슬고슬 지은 흰 밥에 명게를 가득 올린다. 그리고 김가루와 참기름을 넣고 비벼 먹는다. 한입 떠 넣으면 입안 가득 바다가 가득 차는 느낌이다.

통영에 들렀으면 또 다른 별미, 충무김밥을 놓칠 수 없다. 먼 뱃길 김밥이 쉬지 않도록 밥 따로 반찬 따로 싸서 팔던 것이 충무김밥의 유래다. 맨김으로 싼 밥과 오징어를 넣어 맵게 무친 무김치, 그리고 시락국이 전부다. 길 떠나는 어부들을 상대로 팔던 음식이어서 젓가락 대신 이쑤시개를 사용한다는 것도 특징이다.

경주에 황남빵이 있고 안동에 찐빵이 있다면, 통영에는 오미

사꿀빵이 있다. 1960년대, 오미사꿀빵집의 주인 할아버지가 밀가루 배급을 받던 시절, 빵을 만들어서 하나둘 팔았는데 인기가 좋았다고 한다. 이 빵집에 간판이 없어서 사람들은 오랫동안 ‘오미사 옆집 빵집’이라고 불렀다. 오미사는 당시 빵집 옆에 있던 세탁소 이름. 세월이 흘러 오미사는 없어지고 ‘오미사 옆집’으로 불리던 꿀빵집이 ‘오미사’라는 이름을 갖게 됐다. 팔소를 넣어 튀겨낸 빵을 끈적끈적한 물엿에 담근 후 깨를 뿌려낸다. 앞치마를 한 주인 할아버지가 정성껏 빵을 빚는 풍모가 ‘장인’을 연상케 한다.

동백 따라가는 봄 드라이브 환상적

맛있는 음식을 맛봤다면 이제 여행을 즐겨보자. 해안도로를 따라 바다 드라이브를 떠나보자. 통영에서 충무교를 넘으면 산양 일주도로. 이 길은 달아공원과 해양수산연구소를 지나 충무마리나리 조트에 닿는다. 섬을 빙 둘러 돌아가게 돼 있는 해안일주도로는 장장 60리에 달한다. 길은 파도가 치듯 오르내린다. 한 허리를 꺾어 돌면 아담한 포구가 나타나고, 다시 고갯길을 넘으면 푸른 바다가 눈앞에 열린다.

달아공원까지 가는 길, 이즈음이면 동백이 만발한다. 바닷가 기슭에는 매화가 눈부시게 핀다. 대단위 군락은 없지만 길가에 소담하게 핀 봄꽃이 푸른 바다와 어우러져 눈을 즐겁게 한다.

달아공원은 다도해의 풍광을 감상하기에 좋은 곳. ‘달구경하기 좋은 곳’이라는 뜻으로도 쓰인다고 한다. 통영시민들은 보통 ‘달애’라고 부른다.

통영 바다를 잘 보려면 미륵산만 한 곳이 없다. 연둣빛부터 짙은 빛까지 다양한 바다 빛깔을 가진 통영. 미륵산은 한려수도의 풍광을 가장 조망하기 좋은 ‘전망대’다. 높이는 해발 461m. 그다지 높은 산은 아니지만 풍광은 1000m급 이상의 산 못지않게 화려하다. 케이블카를 이용해 쉽게 오를 수 있다.

미륵산 정상에 서면 발아래 한려수도가 펼쳐진다. 올망졸망 뿌려진 섬과 이들 섬을 품은 바다. 동쪽으로 한산도, 화도, 용초도, 죽도, 서쪽으로 곤리도와 소장군도, 소장두도, 대장두도, 남쪽으로 저도와 송도, 학림도, 유도, 연대도, 오곡도가 늘어서 있다.

세병관·한산도 등… 이순신의 충혼 곳곳에

한때 충무시로 불렸던 통영은 충무공 이순신 장군과 인연이 깊은 역사 도시다. 조선 선조 26년(1593) 충무공이 한산도에 설치한 삼도수군통제영이 물으로 옮겨오며 자연스럽게 고을 이름이 통영(統營)이 됐다. 삼도수군통제영은 충청과 전라, 경상 of 수군을 통제했던 곳이다. 수군이 3만6000명, 병선도 550여 척이나 됐다.

통영에 충무공과 관련한 유적이 많다. 시내에 자리한 세병관은 제6대 통제사 이경준이 본영을 두룡포로 옮기면서 만든 것으로 충무공의 전공을 기리기 위해 세운 건물이다. 경복궁 경희루, 여수 진남관과 함께 현존하는 조선시대 건축물 가운데 바닥 면적이 가장 넓다.

통영을 대표하는 풍경은 통영운하의 야경이다. 해 저물 무렵이면 통영운하가 환해진다. 무지개 모양의 거대한 통영대교가 운하를 가르고 있는데 해가 지면 다리 위에 오색 조명이 들어온다. 진입도로변의 가로등이 바닷물에 반사되는 모습도 장관이다.

통영운하는 본래 바닷물이 빠지면 갯벌이 드러나 반도와 섬이 연결되는 곳이었다. 하지만 한산대첩 당시 이순신 장군에게 쫓기던 왜선들이 이곳까지 흘러들어 왔다가 퇴로가 막히자 도망치기 위해 땅을 파헤치고 물길을 뚫었다고 한다. 우리 수군의 공격으로 무수한 왜군이 죽어나갔고 그 까닭에 송장목이라고도 불린다.



영화 <베를린>의 흥풍이 매섭다.
할리우드 블록버스터급의 특급 액션과
탄탄한 스토리로 관객의 시선을 놓치지 않는다.
또한 출연 배우들의 사실감 넘치는 연기는
영화의 완성도를 더해준다.
한국판 '본 시리즈'라는 찬사를 얻은
류승완 감독은 거장에 반열에 올라서고 있다.

글 박소영 기자

<베를린> 액션에 스토리 입히고 유령 같은 음모 벗기다

영화 <베를린>에 대한 호평이 연일 쏟아지고 있다. <부당거래> 이후 입지를 굳힌 류승완 감독이 명실공히 액션 거장으로 우뚝 섰다는 평가다. 봉준호 감독은 “액션마스터 류승완이 <베를린>을 통해 더욱 놀라운 경지에 올랐다”고 평했다.

수많은 평론가들 역시 “한국에서 이런 수준의 첩보액션물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 놀랍다”고 평가한다.

사실 류승완 감독이 걸어온 길은 화려한 꽃길만은 아니었다. 2000년 <죽거나 혹은 나쁘거나>로 입봉한 이래, 그의 필모그래피는 간혹 삐걱거리기도 했다. 이야기보다 액션에 치중한 영화를 관객은 받아들이지 못했다. 그러나 <베를린>에는 액션 이상의 ‘그 무엇’이 있다. 류승완 감독이 전작 <부당거래>에서 보여주었던 ‘스토리’와 그에 내재한 ‘문제의식’이다.(<부당거래>는 류승완의 영화 세계를 질적으로 확장시켰다는 평가를 받았다.)

<베를린>에는 불법 무기 거래를 주도하는 북한 특수 요원 표

종성(하정우), 그의 아내이자 베를린 대사관 통역관인 런정희(전지현), 그리고 북한의 무기 거래와 비밀 계좌를 추적하는 남한 국정원 요원 정진수(한석규)가 등장한다. 여기에 베를린을 장악하기 위해 북한에서 온 비밀 요원 동명수(류승범)가 가세한다.

남북 첩보기관에 모사드까지

베를린에서 무기를 사들이는 아랍 무기거래상 압둘과, 이스라엘 첩보기관 모사드의 요원이자 표종성을 위협에 빠뜨리는 인물인 다간의 등장은 영화의 스케일을 한껏 키워놓는다. 이들은 영화 초반부터 종반까지 실 톱 없이 서로 쫓고 쫓기는 추격전을 만들어낸다. 빠른 스토리 전개는 관객들을 긴장감 속에 몰아넣는다.

북한 최고의 비밀 요원인 표종성은 러시아·중동의 무장 세력과 불법 무기 거래를 하던 중 이스라엘 첩보기관 모사드의 습격을 받는다. 국정원 요원 정진수는 이들의 거래 현장을 덮치려다 실패

해 상부로부터 질책을 당한다. 정진수는 정체를 알 수 없는 ‘고스트’ 표종성의 실체를 밝혀내기 위해 뒤를 쫓다가 그 배후에 숨겨진 국제적 음모를 알게 되면서 위기에 빠진다.

한편 베를린에 파견된 북한 대사 리학수(이경영)는 평양에서 새로운 감찰 요원 동명수가 파견되었다는 소식에 본능적으로 신변의 위협을 느낀다. 동명수는 표종성의 아내 런정희가 내부 첩자이고, 그가 무기 밀매 정보를 바깥으로 흘린 것이라 주장하며 표종성의 숨통을 조여 온다. 이에 표종성은 아내를 믿지 못하고 뒤를 밟는다. 런정희는 당에 배신당한 상황에서 남편마저 자신을 믿지 못한다는 생각에 괴로워한다.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첩보원들의 운명

<베를린>은 살아서 돌아갈 수 없는 도시다. 냉전시대의 상징인 도시 베를린은 그 자체만으로도 영화적 설정을 감당하기에 충분하다. 한



때 이곳은 피 튀기는 첩보전이 밥 먹듯 치러지던 첩보 요원들의 천국이었다. 배신과 음모, 살육의 그림자가 음울하게 드리워진 곳이다.

등장 인물들은 각자가 원하는 것을 위해 서로를 표적으로 삼는다. 이런 과정에서 표종성과 정진수는 자신들을 노리는 더 큰 음모를 눈치채지 못하고 번번이 속임을 당한다. 그리고 이들이 피 튀기며 싸우는 동안 영화는 어디선가 이들을 쳐다보고 있는, 보이지 않는 사악한 존재에 대해 이야기한다.

<베를린>은 <추운 나라에서 온 스파이>나 <베를린 스파이>와 같은 유명 스파이물 드라마의 전형을 따르는 듯하다. 목적을 위해 이용당하고, 또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첩보 요원들의 가혹한 운명, 그리고 음모를 꾸미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세력, 조직의 배신과 음모를 다룬다는 점에서 ‘본 시리즈’ 같기도 하고, 권력 아래 개인이 무참히 짓밟힌다는 점에서 <실미도>를 보는 것 같기도 하다.

‘나트륨과의 전쟁’ 싱거워야 건강해진다

나이가 들면 건강하기 위한 새로운 결심을 많이 하게 된다.

흡연자는 담배를 끊겠다고 하거나, 운동을 열심히 해야겠다는 사람도 많다.

다이어트하겠다는 이들도 적지 않으리라. 실천만 한다면 건강에 좋은 것들이다.

하지만, 올해는 좀 색다른 결심을 해봤으면 한다. 싱겁게 먹기 다짐이다.

글·김철중 (조선일보 의학전문기자·영양학과 전문의)



나트륨과 소금

나트륨은 철분·칼슘과 같은 무기질의 일종이다. 인체에서 삼투압을 통해 체액의 양을 조절한다. 과다 섭취하면 고혈압을 유발한다. 소금 성분의 약 40%가 나트륨(Na·Sodium)이고, 소금이 나트륨 섭취의 최대 공급원이기 때문에 ‘싱겁게 먹기’는 ‘나트륨 적게 먹기’와 같은 의미로 쓰인다.

그동안 당신은 짜게 먹지 말라는 말을 술하게 들었을 것이다. 싱겁게 먹으려고 노력했을 것이다. 그럼에도 당신의 실제 소금 섭취량이 매년 늘고 있다면 믿겠는가. 우리가 소금의 주성분인 나트륨 섭취와 관련해 잘못 아는 것이 있다. 어쩌면 지금까지 속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우리가 집에서 먹는 소금량 즉 나트륨 섭취량은 전체의 5%에 불과하다. 95%는 가공식품과 외식을 통해 먹고 있다는 사실 말이다. 사람들의 입맛을 돋우기 위해 알게 모르게 소금이 듬뿍 들어간 햄·소시지·수프·과자·라면 등 가공식품과 다양한 식품 재료, 단골 메뉴인 짜장면·설렁탕·칼국수·김치찌개 등을 통해 우리는 잔뜩 소금을 먹고 있다. 그러니 개인이 혼자서 아무리 싱겁게 먹으려고 발버둥 쳐봐도 소금과의 전쟁은 싱겁게 끝날 수밖에 없었다. 현재 한국인의 하루 나트륨 섭취량(4791mg)은 WHO(세계보건기구) 권장량 2000mg(소금 5g 또는 소금 1티스푼)의 두 배 이상이다.

과잉 섭취면 고혈압·심장병·뇌졸중·만성신부전

음식이 너무 짜서 못 먹겠다는 임계점 이전까지 나트륨 농도를 올릴수록 음식 맛은 좋아진다. 그러니 식품 회사들과 식당들은 짭짤을 경쟁적으로 추구한다. 짭짤은 또한 중독성도 있다. 그 결과 피자는 바닷물보다 짜졌고, 즉석 수프나 라면에 나트륨 농도가 열어지면 당장 매출이 떨어진다. 짜면 살고, 싱거우면 죽는 형국이다. 게다가 소금은 싸다. 아낄 이유가 없다. 인공과 가공의 세상과 떨어져 사는 아마존 원주민들의 하루 소금 섭취량은 우리의 10분에 1밖에 안 된다. 현대인이 얼마나 짭짤에 길들여 있는지를 알 수 있다. 인간의 몸은 하루에 소금 0.5~1g만 섭취하면 된다고 의학자들은 말한다.

짜게 먹으면 왜 건강에 안 좋을까. 섭취된 나트륨은 핏속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삼투압 현상에 따라 염분 농도를 맞추기 위해 혈관 속으로 주변의 물이 대거 들어간다. 체내 수분이 혈액으로 가니, 몸은 갈증을 느낀다. 혈액의 볼륨은 늘어나 혈압이 상승한다. 고혈압은 권투에서 지속적으로 잼을 날리듯, 심장과 뇌, 신장 등 주요 장기를 골병들게 한다. 나트륨은 소금의 주성분으로 인체 필수 원소이지만, 과잉 섭취할 경우 고혈압·심장병·뇌졸중·만성신

부전 등을 일으키고 골다공증의 위험이 커진다. 염도가 높은 음식은 또한 위벽을 헐게 해 위암 발병 요인도 된다.

더욱이 최신 연구에 따르면 나트륨 그 자체가 혈관의 내피세포를 위축시켜 동맥경화를 유발하는 것으로 나온다. 즉 나트륨 섭취를 최소화할수록 건강에 좋다는 얘기다. 이 때문에 나트륨을 중독성 건강 해악 물질로 규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싱겁게 먹는 음식문화 사회적으로 정착시켜야

나트륨은 식품 가공과정에 많이 첨가된다. 따라서 외식을 많이 하거나 미리 조리된 음식을 자주 사먹을 경우 나트륨 섭취는 더욱 늘어날 우려가 있다. 가능한 한 집에서 음식을 직접 조리해 먹고 싱겁게 먹는 것이 현대인에게 보약인 셈이다. 음식을 통한 나트륨 과다 섭취를 줄이는 방법의 핵심은 재료를 삭히거나 줄이지 말고 신선한 상태에서 먹는 것이다.

한국인의 나트륨 섭취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단일 식품은 배추김치다. 고혈압 환자는 배추김치 대신 비교적 나트륨 함량이 적은 깍두기, 동치미, 나박김치 등으로 섭취한다. 어렸을 때부터 짭짤하게 먹는 것에 익숙한 사람은 성인이 되어서 식습관을 바꾸기 어렵다. 가족 전체가 싱겁게 먹는 음식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

나트륨 섭취 줄이는 식사법

1. 반찬을 밥을 먹기 위해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반찬을 먹기 위해 만들면 자연스레 싱거워진다.
2. 양념이 배는 조림이나 찜보다는 데치기, 굵기 요리를 찾는다.
3. 젓갈, 장아찌 등은 야채를 많이 섞어서 되도록 적게 먹는다.
4. 국은 맑게 끓이고, 건더기 위주로 먹는다.
5. 조미료 대신 쑥갓, 깻잎, 파 등의 향미 채소를 많이 쓴다.
6. 녹말 물로 맛을 내는 소스로 바꾸면 나트륨 섭취율이 낮아진다.
7. 뜨거우면 짭짤을 못 느끼니 끓기 전에 간을 보자.
8. 가공식품보다는 신선한 재료로 요리하는 것이 좋다.
9. 아침식사를 밥 대신 빵으로 바꾸면 나트륨 섭취를 줄일 수 있다.
10. 배추김치보다는 나트륨이 적은 깍두기, 동치미, 나박김치 등을 먹자.

뇌물죄와 반인륜 범죄는 죽을 때까지 사면 제외

지난 2월 초 TV드라마 <마의>에서 임금이 죄를 짓고 청나라로 피신했다 돌아온 의관 백광현(조승우 분)을 사면하는 장면이 나온다. 물론 드라마 속 이야기이긴 하지만 실제로 옛 왕조시대에도 왕이 바뀌거나 경사 등이 생기면 사면하는 사례가 많았다. 그런데 요즘 시대와 그 시대의 사면 실태를 보면 얼핏 비슷하면서도 다른 기준이 있어 흥미를 끈다.

글·김정미 (사나리오 작가)

최근 설을 맞아 사면이 이루어지면서 사회적으로 왈가왈부 말들이 많았다. 사면을 한 측에서는 법에 따라 이루어진 사면이라면서 조선시대에도 왕이 바뀌면 옥문을 열었다고 주장했다. 이 말이 또 역사적 사실을 왜곡했다고 반발을 샀다. 조선시대 사면이 왕권 교체시기에 이루어진 것은 맞지만 그 사면 대상에는 장오죄, 즉 뇌물을 받은 자들은 포함시키지 않았다는 반론이 나온 것이다.

그렇다면 감론을박으로 민심을 흔들어

놓은 사면제도는 대체 언제부터 왜 시작된 것일까?

사면의 사전적 의미는 국가의 최고권자가 특권으로 범죄인에 대한 형벌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거나 형별로 상실된 자격을 회복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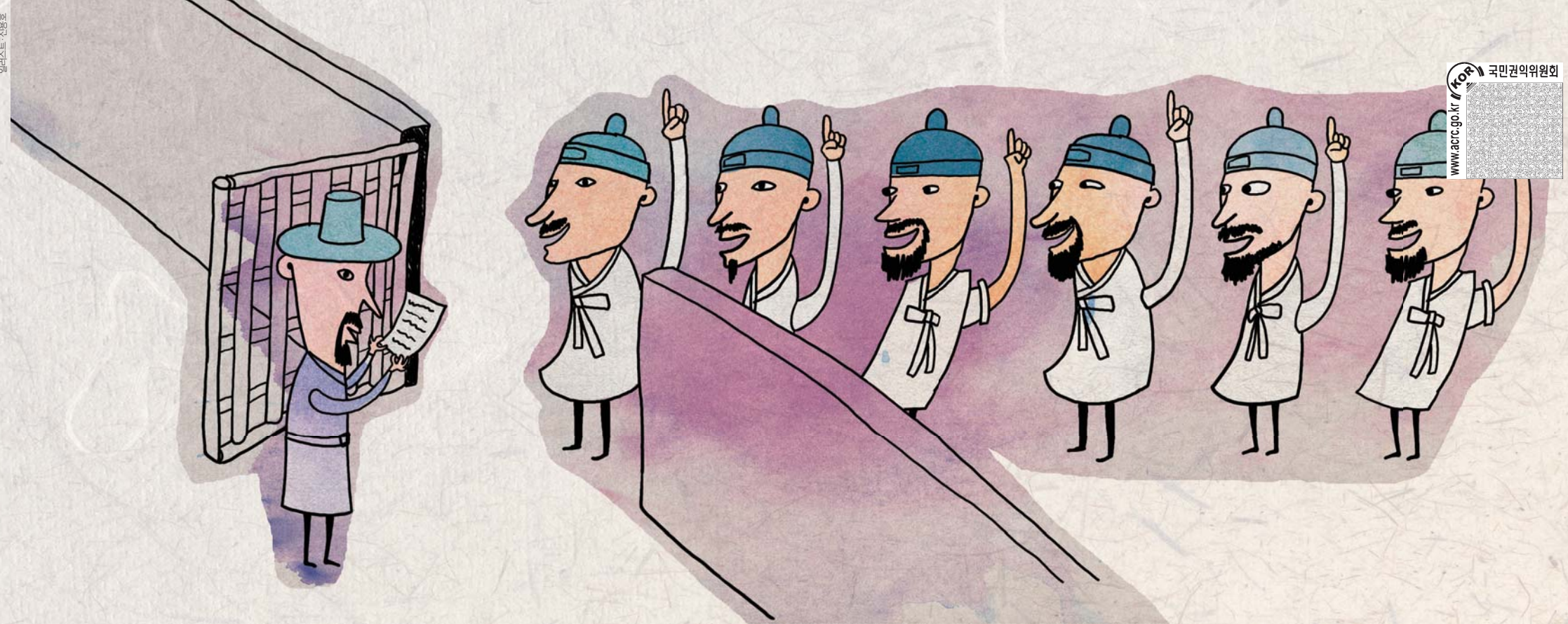
요즘에는 국가 최고권자가 대통령이지만 왕조시대의 최고권자는 왕이었다. 그래서 왕조시대 사면은 왕이 특별히 은혜를 베풀다 하여 '은사'라고도 하였다. 사면은 법 제도가 확립되면서 혹여 획일적인 제도로

희생되는 억울한 사연이 있는 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인도주의적 제도였다.

중국은 춘추전국시대부터... 신라 초기에 사면 기록 있어

사면의 역사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매우 길다. 서양에서도 사면은 왕권의 숭고함과 덕을 바탕으로 한 특권행위로 여겨 오래전부터 시작되었다. 중국에서는 <상서> <주례> 등에 사면에 대한 언급이 있어 춘추전국시대 이전에 이미 사면제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사면제도의 역사도 긴데 삼국시대부터 이미 사면이 이루어졌다. 신라의 경우 유리왕 2년(25)에 종묘에 제사를 지내고 사면을 했다는 기록이 있다. 이후 사면제도는 고려, 조선으로 이어졌고 해방 후에도 대한민국 헌정사가 시작된 이후 오늘날까지 지속되고 있다.



조선시대 사면은 주로 왕이 새로 바뀌면 이루어졌는데, 새로 즉위한 왕은 민심을 얻고 선정을 다짐하는 의미로 대규모 사면을 단행하였다. 이외에도 사면은 국가적 경사, 즉 왕의 결혼이나 세자 책봉이 있을 때도 이루어졌고, 왕실에 병자가 발생하면 억울하게 죄를 뒤집어쓴 사람들의 원한으로 발병했다고 보고 사면을 실시하기도 하였다.

또 왕의 정치능력과 자연현상을 결부시켜 자연재해가 일어나면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책으로 사면을 실시하였다. <조선왕조실록>에 남은 사면의 기록은 총 455회인데 이 중 사면을 가장 많이 한 왕은 9대 성종으로 89회 실시하였다.

조선시대 일반사면은 '대사령'이라고 하였는데 대사령은 내려진 그 시점부터 그 전의 범행일체는 불문에 부치는 형태였다. 다만 이 사면에도 예외가 있었는데 그것은

장오죄와 강상죄를 지은 죄인으로 죽을 때까지 그 죄를 사면하지 않았다. 장오죄는 오늘날로 말하면 뇌물수수죄에 해당하였고 강상죄는 유교적 윤리관에 반하는 행위를 저지른 것을 말한다. 장오죄와 강상죄를 저지른 경우 그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후손들도 벼슬길을 막아 짓값을 툭툭히 치르도록 하였다.

왕의 사면이 부당할 경우 상소·공론 통해 철회되기도

오늘날 사면은 대통령의 특권이기기는 하지만 법의 원칙에 의거하여 실시하기 때문에 한번 사면이 정해지면 무르기가 어렵지만 조선시대에는 왕의 사면이 부당할 경우 간관들의 상소와 공론 등에 의해 사면이 철회되기도 하였다.

조선 초기 단종을 몰아내고 왕위를 찬탈한 세조는 강력한 왕권과 다소간 공포정

치를 통해 부족한 정당성에 대한 반발을 억누르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공신에 대한 부당한 사면에 반발한 간관의 의견을 들어준 적이 있다. 계유정난의 공신인 최명전과 김암이 아내를 립박하고 형제간에 불화하여 강상죄를 짓자 세조는 이들을 공신이라는 이유로 사면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간관들은 이 사면이 부당함을 연일 아뢰었고 세조는 숙고 끝에 이들을 사면에서 제외시켰다. 한편 영조 때는 사면으로 석방된 홍흥무란자의 장오죄가 드러나자 다시 잡아들여 죄를 물어야 한다는 간관의 상소를 받아들이기도 하였다.

사면은 통치자가 할 수 있는 상당히 괜찮은 정치행위 중 하나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 괜찮은 제도가 정말 괜찮아지려면 이를 행하는 사람의 따뜻하고 정당한 마음과 밝은 눈, 그리고 양심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함도 염두에 둘 일이다.



암웨이갤러리에 전시된 설치 미술가 변대용의 작품.



코트라 본관 1층 로비에 있는 오픈갤러리.



일주&선화갤러리 내부 모습.



〈황금 DNA : 한국 현대미술 연속 기획전〉을 열고 있다. 이 전시는 세계무대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16명의 한국 작가를 통해 그들의 작품 속에 숨겨진 한국 현대미술의 뛰어난 문화 유전자를 알아보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전시는 두 명의 작가가 하나의 주제를 중심으로 작품을 선보이는 방식(2인전)으로 연속 진행된다.

지난해 10월 25일 '21세기에 우리의 전통을 묻다'라는 주제로 김정옥과 배준성 작가를 소개한 데 이어 두 번째 전시에서는 '지적 사유로서의 그림 그리기'라는 주제로 박미나, 정수진 작가의 작품 총 37점이 전시된다. 선화예술문화재단 채문정 큐레이터는 "이번 전시를 통해 기존 미술이론의 차용과 조합, 재해석을 통해 자신만의 독창적 작품 세계를 모색하는 오늘날의 작가들을 만나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작품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도슨트(전시 설명가)를 운영한다. 〈황금 DNA : 한국 현대미술 연속 기획전-박미나&정수진〉전은 3월 15일까지 열리며 화~금요일 오후 12시 30분과 4시 30분, 토~일요일은 정오와 오후 2시에 도슨트가 작품 해설을 진행한다.

문의: (02)2002-7777

암웨이브랜즈센터 '암웨이갤러리'

3월 4일까지 설치미술가 변대용 개인전

경기도 분당 암웨이브랜즈센터 내에 있는 암웨이갤러리는 한국 암웨이가 후원하는 곳. 3월 4일까지 설치미술가 변대용의 개인전 〈당신의 위로와 위안〉을 연다. 평소 현대인의 소소한 삶의 모습과 세상의 이면을 아름다운 조각으로 묘사해온 작가는 이번 전시에 자신의 이야기를 신화 속 인물이나 주변 인물에 담아낸 작품 10여 점을 선보인다.

3년 전 녹내장으로 시력을 잃게 된 아버지를 주제로 한 〈밤〉, 새끼 북극곰이 아이스크림을 찾아 떠나는 여행 스토리를 담은 신작 〈아이스크림을 찾아 떠난 여행〉 등의 작품은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훈훈해진다. 휴관일을 제외한 매일 오전 11시, 오후 2·5시에는 도슨트가 작품해설을 진행한다.

문의: (031)786-1199

드-예술가, 기업의 문을 열다〉전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오는 3월 6일까지는 〈KOTRA와 한국일러스트레이션학회가 함께하는 추천 작가전 5〉를 연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소통과 대중성을 고루 갖춘 윤현정·이석연·이유리·조윤서·호영수 작가의 일러스트 작품들을 소개한다.

이밖에 오픈갤러리에서는 올해 기업과 미술가의 협업 작품 전시회인 〈오픈마인드 2〉, 중소기업 제품과 모든 공간을 설치미술로 표현하는 〈중소기업 라이프전〉, 한류 및 문화경영 확산을 위한 신진작가 대상 〈한류 공모전〉 등의 전시를 열 예정이다.

문의: 1600-7119

태광그룹 '일주&선화갤러리'

한국 현대미술 작가와 작품들 소개

서울 신문로 흥국생명빌딩 3층 일주&선화갤러리는 태광그룹 산하 선화예술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곳이다.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와 서울문화재단, 태광그룹의 후원으로

여기가 회사야? 갤러리아?

기업들 사내에 열린 문화공간 설치... 문화향유 기회 제공

각 기업마다 사회공헌활동을 다양하게 펼치고 있는 가운데 그 일환으로 갤러리 등 열린 문화공간을 만들어 무료 개방하는 곳들도 늘고 있다. 수준 높은 전시와 무료 혹은 저렴한 관람료로 만날 수 있는 기업의 열린 문화공간들을 소개한다.

글·박근희 (조선매거진 기자)

코트라 '오픈갤러리'

로비에 오픈갤러리... 연중 전시회 열어

코트라(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지난해 6월 서울 서초구 코트라 본관 1층 로비에 오픈갤러리를 마련했다. 코트라 창립 50주년을 기념해 중소기업에게 문화경영의 중요성을 알리고, 예술을 통한 중소기업 경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이다.

이를 기념하고자 지난해 개관과 동시에 〈한국무역 50년, KOTRA 50년〉을 연 데 이어 한젼마씨를 크리에이트 디렉터로 영입, 지난해 12월 6일부터 올 1월 31일까지 첫 기획전시 〈오픈마인

반전세 서민에 월세자금 빌려준다

금감원 3월부터 시행... 연 5~6% 저금리로 대출



앞으로 신용도가 낮은 세입자도 낮은 금리의 반전세(보증금 외에 매달 월세를 추가로 내는 임대차 계약) 월세자금을 대출 받을 수 있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반전세 월세를 목적으로 은행에서 대출받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만료 시에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서울보증보험(주)이 대출해준 은행에 그 월세 대출원리금을 대신 갚아주는 월세자금 대출 보증보험을 2013년 3월 출시한다”고 밝혔다.

월세자금대출 보증보험은 최근 주택 가격 하락과 저금리 추세로 임대차 계약이 전세에서 반전세로 전환되는 경우가 많아 (2010년 전체가구의 17.8%) 월세자금이 부

족한 서민들이 보다 쉽고 싸게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금융상품이다. 은행이 임차인으로부터 대출신청을 받은 후 보증보험에 가입하며 보험료는 은행이 부담한다. 우선 신한은행에서 서울보증보험과 협약을 체결하고 3월부터 월세나눔통장(가칭)을 출시한 후 향후 다른 은행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임차인은 서울보증보험과 협약을 맺은 은행을 방문해 반전세 월세 대출을 신청한 후 은행과 월세 대출(한도대출)을 약정하고 마이너스통장을 개설한다. 은행은 임대차기간 만료 또는 중도해지 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갖는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에 질권 설정(월세

대출 한도의 120%)을 하며 임차인에게 별도 비용이 발행하지 않는다.

이후 은행은 임대인(집주인)에게 매월 월세 대출금을 직접 송금하며 송금 금액만큼 임차인 마이너스통장에 마이너스 입금이 된다. 임차인은 임차기간이 만료되면 은행에 대출원리금을 상환하면 된다.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 서울보증보험이 임차인 대신 은행에 마이너스 대출 상환액의 대출원리금을 지급한다.

금감원은 “신용도가 낮고 월세자금이 부족한 임차인은 연 15~20%에 달하는 제2금융권의 고금리 대출상품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으나 앞으로는 은행에서 연 5~6%의 저렴한 이자로 대출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매달 월세를 내야 하는 부담이 없고 여유자금이 생기면 마이너스통장에 입금하여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월세자금대출 보증보험 개발로 반전세 월세 임차인이 연간 가구당 평균 10만여 원, 전체적으로는 약 50억 원의 이자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글·이상훈 기자

‘월세자금대출 보증보험’ 업무 흐름도



이성보 위원장, 설맞이 민생현장 방문

이성보 국민권익위원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전통시장과 관내 독거노인 세대 등을 방문했다.

이성보 위원장은 2월 7일 서울 은평구 불광동 소재 연서시장을 방문해 명절 물가 동향을 파악하고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경청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12년 추석 연서시장을 방문한 데 이어 이번 설 명절에도 같은 현장을 방문해 상인들과 지속적인 교류를 나눴다.

또 이성보 위원장은 시장 방문 직후 서대문구 관내 독거노인 세대를 방문해 위문금과 쌀 등 위문물품을 전달하는 등 이웃과 어려움을 함께하며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데 앞장섰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 박재영 사무처장은 2월 6일 아현노인복지센터를 방문해 배식봉사에 나서는 한편 위문물품을 전달하는 등 설 명절을 앞두고 이웃들과 따뜻한 온정을 나눴다.

고충민원처리 우수사례 발표대회

국민권익위원회는 2월 1일 서대문구 통일로 권익위 청사 대강당에서 ‘고충민원처리 우수사례 발표 경진대회’를 열었다. 이번 경진대회는 2012년 처리한 민원 중 성공 및 실패 사례를 취합하고 순위를 산정해 우수 사례에 대상·우수상·장려상을 선정해 시상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총 13팀이 참여한 가운데 수상 건은 대상 1건과 의결부문 우수상과 장려상, 조정합의 부문 우수상과 장려상 등 총 5건이었다. 심사위원은 위원회 간부 2명과 외

부 전문가 3명 등 총 5인이 맡았다.

대상은 교통도로 민원과의 ‘호남고속철도 정읍역사 및 지하차도 공사 재개’ 건이 수상했다. 의결부문 우수상은 산업농림환경 민원과의 ‘옥정호 상수원 보호 구역 재조정 요구 고충민원 해결사례’가, 장려상은 주택건축 민원과의 ‘불쌍한 세입자들을 도와주세요’ 건이 수상했다.

조정합의부문 우수상은 재정세무 민원과의 ‘전세 얻기 전에 집주인의 체납세금 확인하라고?’ 건이, 장려상은 산업농림환경 민원과의 ‘고압가스 안전거리 규정 개선’ 건이 선정됐다. 경진대회 수상작에는 대상 50만 원, 우수상 각 30만 원, 장려상 각 10만 원의 상금이 지급됐으며 국민권익위원회는 수상 사례에 대한 적극적인 대내외 홍보에 나설 예정이다.

국민신문고 스리랑카어 민원창구 개통

국민권익위원회는 약 2만

3000명에 이르는 국내거

주 스리랑카인들의 권익보

호를 위해 12월 21일 서울

중구 신당동 소재 주한 스

리랑카대사관에서 온라인

정부민원포탈인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의 스리랑카어 민원창구 개통식을 갖고 정식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성보 국민권익위원장 과 티샤 위제라트네 주한 스리랑카대사 등이 참석했다.

이번 민원창구 개통을 통해 그동안 한국어를 몰라 민원을 제출하기 어려웠던 스리랑카 국민들이 편리하게 우리나라 행정기관에 민원을 제출할 수 있게 되었다.

스리랑카어로 민원을 신청하려면 국민신문고에 접속해 스리랑카 국기를 클릭한 후 정해진 양식에 따라 스리랑카어로 민원을 신청하면 된다. 우리나라 정부 공무원이 작성한 민원에 대한 답변도 민원인에게 스리랑카어로 제공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08년 6월부터 영어, 일어, 중국어를 시작으로 베트남어, 몽골어, 인도네시아어, 태국어, 우즈베키스탄어, 방글라데시어, 캄보디아어 등 총 10개 국어 민원창구를 개통해 민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민권익〉을 읽고 난 소감과 바라는 점 등을 엽서에 적어 보내주세요. 엽서를 통해 다양한 의견과 퀴즈 정답을 보내주시는 분들 중 다섯 분을 추첨해 문화상품권을 드립니다. (응모마감 3월 10일)



독자의 작은 소리도 크게 들겠습니다

2012년 한 해 동안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격월간 〈국민권익〉과 함께했던 독자 여러분의 사연을 소개합니다.

가까운 분이 집 근처를 지나는 경부고속도로 소음으로 한동안 고생을 하셨는데, 담당 시청에서도 해결하지 못하던 것을, 2012년 1월 국민권익위원회가 함께 한 현장조정으로 방음벽을 새로 설치하고 보완하기로 했다는 이야기를 환한 표정으로 말씀하시던 기억이 납니다. 국민권익위원회 하면 나와 멀게 느껴졌는데, 이렇게 실제로 민원 현장에서 조정하고 국민들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모습을 보니 우리와 함께하는 친숙한 존재로 느껴집니다.

(홍대욱·경남 양산시)

〈국민권익〉을 처음 읽기 시작한 작년에는 그냥 재미로 읽었습니다. '설마 내가 국민권익위원회의 도움받을 일이 있나'라는 심정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다 2012년 초 집 인근 공사현장의 무리한 공사로 저희 집에 균열이 생기는 피해를 보았지요. 공사업자와 수개월간 실랑이를 하면서 보상받을 길이 요원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때 국민권익위원회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도움을 청했습니다. 조사관님께서 평택의 저희 집에 방문해 공사업자와 타협의 중재안을 내놓아 지금은 원만히 해결되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시민의 힘이 되어줬습니다.

(이영호·경기 평택시)

제 사연이 〈국민권익〉에 실린 것을 보며 아이처럼 기뻐하던 엄마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엄마가 돌아가신 지 6개월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이제 〈국민권익〉은 엄마를 떠올리게 하는 매개체가 되었습니다.

(이기만·대전 서구)

솔직히 저는 국민권익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를 혼동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1년 동안 〈국민권익〉을 받아보면서 이제 두 기관의 차이를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선아영·광주 남구)

‘국민공감’ 이벤트 당첨자

김미정(충북 충주시) 김아름(부산 서구) 박진이(전북 익산시) 선아영(광주 남구) 이기만(대전 서구)

이영호(경기 평택시) 조영희(창원 진해구) 최영신(부산 서구) 한지형(서울 성북구) 홍대욱(경남 양산시)

P U Z Z L E

			1		
		2		3	
	4				
5				6	
		7			
	8				

가로

2. '하늘의 뜻을 안다'는 신 실을 이르는 말.

4. "국민신문고를 통해 최근 3년간 설 관련 민원 분석 결과 체불00을 지급받게 해달라는 민원이 가장 많이 제기된 것으로 조사됐다."

5. 일반적으로 두루 솜 "달라는 세계 곳곳에서 00된다."

6. 학식이 있고 예절 바르며 의리와 원칙을 지키고 관직이나 재물을 탐내지 않는 사람을 이르는 말은?

7. 펄펄할 할 때 물을 끌어 올리기 위해 위에서 붓는 물.

8. 남의 감정, 의견, 주장에 자기도 그렇다고 느끼는 것. 생활00정책.

세로

1. 귀하고 천함을 아울러 이르는 말. "직업에 00이 있습니까?"

2. 바로 이때.

3. "국민신문고를 통해 최근 3년간 설 관련 민원 분석 결과 0000의 물품 배송과정에서 생기는 불만이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4. 직무를 맡겨 사람을 씀. 초등학교 교사 00고시.

5. 도다리썩국, 멧게비빔밥, 쭈기미매운탕 등 봄철 미각으로 미식가들을 불러들이고 있는 남해안 이곳은?

7. 하던 일을 마물려서 끝냄. 정해진 기한의 끝.



정부대표민원전화

상담시간 평일 08:00~21:00 / 토요일 09:00~13:00

예약상담 www.110.go.kr m.110.go.kr 휴대전화 문자상담 110

트위터 110callcenter 페이스북 110call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대표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정부민원!

궁금한 일!

불편한 일!

어려운 일이 생기면?

